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발 간 사 ■ ■ ■

2012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는 개원 23주년이 되는 해이며, 국가적으로는 제 19대 국회의 개원,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는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국가정책연구소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청소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미래세대 정책은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와 현황분석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 우선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온 청소년정책 과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바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집된 청소년 통계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처한 현황을 분석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의견조사를 통해 향후 입법부에서 추진할 청소년 정책방향의 윤곽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청소년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단기 수시과제의 형식으로 추진되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본 연구가 새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보고서 작성에 노력해 주신 연구진과 연구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각계의 전문가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의견조사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수행한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현황을 분석하여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청소년 정책 안전과 그 시급성 및 중요성의 순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생산된 다양한 청소년정책 관련 자료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120명(모집단의 40%)대상 청소년정책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 및 이명박정부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청소년정책의 성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청소년 참여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정책, 주5일 수업제도 전면실시와 연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정책, 건전인터넷게임 이용제도 관련한 유해매체규제제도 등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유익환경의 조성보다는 유해환경의 규제에 편중된 보호정책, 학교중심의 청소년정책,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청소년 활동정책,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 등 관련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결과 계속 악화되는 청소년 인적 자원의 문제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무엇보다도 2차례나 이루어진 주무부처의 이관은 청소년정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을 축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제 19대 국회의원들은 청년실업과 성인기 이행 지연, 입시경쟁 및 사교육, 청소년 폭력과 유해환경 증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청소년의 낮은 행복과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인성교육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복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정책 안전으로 선정했다. 반면 청소년 지도사 처우개선 정책,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의 시급성을 높이 평가한 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의 키워드로 행복, 역량, 건강을 제시하였고,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정책의 키워드는 자립, 안전, 통합을 제안하였다. 또한 SWOT 분석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이명박정부, 청소년정책, 성과, 한계, 차기정부, 제19대국회, 부처이관, 청년실업, 성인기이행지연, 입시경쟁, 양극화, 유해환경, 행복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정책을 개괄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부터 추진해야 할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 이 연구는 우선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공과 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새롭게 개원된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후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이명박 정부 시기에 생산된 다양한 청소년정책 관련 부처 업무보고자료,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청소년정책 연구논문 및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핵심내용을 추출했다.
- 설문조사
 - 청소년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한 입법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0%인 120명이 응답하였으며,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60명, 민주통합당 52명, 통합진보당 4명, 자유선진당 2명, 무소속 2명이 참여하였다.
- 세미나 개최
 -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 및 이명박정부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 주요결과

1) 이명박정부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 청소년 정책비전 및 추진체계 분야

-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참여 증진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도 UN 공공행정상(PSA)을 수상,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학업중단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퇴 전 2주간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역량개발 관련 민·관 연계 체계를 강화하였다.
- 반면 정책자원 투입이 학교에 편중되었으며, 첨단 정보통신 영역에서 청소년정책이 주로 규제에 치우쳤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청소년 정책수행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의 치우개선은 여전히 열악하여 전체적인 정책서비스의 질 향상에 근본적인 한계로 남아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정책 분야

- 2009년부터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를 도입하여 각급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제도교육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12년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를 200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한 청소년 전문수련시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강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였으며 청소년문화축제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이벤트의 빈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청소년 활동의 체계화도 추진하였다.
- 그러나 이와같은 정책이 주로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통합성과 지속성이 부족하였고, 전면적으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제도가 일부청소년에게 그 혜택이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청소년참여정책 분야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의 청소년참여기구를 활성화함으로

써 2012년 현재 185개 참여위원회와 305개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전국단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의 성과를 인정받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범위와 참여청소년들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특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한된 참여가 아닌 보편적으로 제도화된 청소년 참여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참여에 실효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참여라기 보다는 형식상에 그치는 참여가 더 많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및 보호정책 분야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대응을 중점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의 정례화, 지역중심의 청소년유해업소 감시활동 강화, 청소년 유해약물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제도화 하는 등의 청소년보호 정책이 추진되었다.
- 특히 2011년 11월, ‘게임셧다운제도’로 불리는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의 도입과 청소년유해매체 정보를 담은 ‘청소년특정고시’의 정례화를 통해 계속 변화하는 청소년매체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다. 그 외에 청소년스스로지킴이(Youth Patrol) 활동을 강화하여 매체환경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대응정책이 주로 유해매체로부터의 보호에 치중되어 있고 사회양극화에 따른 청소년 복지정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 또한 청소년 복지정책이 사회 양극화에 따른 청소년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학등록금 및 청년실업 문제 등, 대학입학 이후의 후기청소년의 생활환경개선이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청소년 복지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해야 할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청소년보호 정책에 있어서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에 편중된 반면, 청소년들의 유익환경 조성에는 매우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2) 제19대 국회의원 대상 의견조사결과

○ 청년실업과 성인기 이행 지연을 가장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인식

- 의견조사 결과, 제 19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여기는 5대 청소년 환경 요인은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성인기 이행 지연, 입시경쟁 심화 및 사교육,

- 학교폭력 포함 청소년 폭력과 유해환경 증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빈곤가정 청소년의 증가, 청소년의 낮은 행복과 삶의 질로서 참여한 국회의원들 중 40% 이상이 이를 선정했다
- 향후 19대 국회에서 다룰 청소년 정책 안건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는 인성교육을 강화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복지 및 지원 강화정책,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이 선정되었다.
 - 청소년 지도사 처우개선 정책,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의 시급성을 높이 평가한 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 현황인식은 공유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응정책 추진의지는 부족함

- 제19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청소년 생활환경 및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는 반면,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으며, 현실보다는 미디어에 의해 부각된 의제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 ‘청소년 인성교육’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입법부가 여전히 청소년정책을 교육과 육성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후기청소년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정책’이나 ‘청소년 삶의 질 저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인 ‘청소년 생활환경의 개선 정책’의 시급성이 낮은 평가를 받았고 청소년 정책 추진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강화나 청소년 지도사등의 청소년관련 인력 처우개선 문제가 뒤로 밀려났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제언

○ 청소년정책추진의 키워드

-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의 키워드로 행복, 역량, 건강을 제시하였고,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정책의 키워드는 자립, 안전, 통합을 제안하였다.

○ 청소년정책주요추진과제

- SWOT 분석에 따라 강점에 기반한 정책으로 청소년친화적 학습환경 조성, 적시학습(Just-in-time learning)강화, 다양한 학습인증제도 확대, 청소년 온라인 참여경로 설치 및 실효화 등을 제시하였다.
-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글로벌다문화역량 강화, 청소년 성인기 이행지원 강화, 청소년 유익매체환경 조성 정책을 제시하였다.
-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기존의 청소년 지원카드를 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Youth Opportunity Card)제도 도입,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역사회 청소년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역량기반 학습체계 구축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편,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직업체험장 제도 도입,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지역비교 사업 실시,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종합안전망 구축, 청소년폭력 예방 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학업중단/다문화/탈북/가출/시설보호 및 시설퇴소/장애/한부모 및 조손가정/청소년한부모 가정/소년원출원 청소년 등 다양한 여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 청소년 정책 주무부서의 연속성과 안정성 보장이 선결과제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로 두 차례에 걸쳐 주관부처가 이관되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로 작용했다.
- 5년간 장기적인 정책 추진 계획으로 제시된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희망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 ‘제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바뀌었고 새롭게 이관된 중앙부처의 입장과 부처 특성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해 오면서 지난 5년 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선 가장 적절한 청소년정책 주무부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일단 확정된 주무부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청소년 정책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제2장 이명박정부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7
1. 청소년정책 비전 및 추진체계의 성과와 한계	9
2. 청소년활동정책의 성과와 한계	16
3. 청소년참여정책의 성과와 한계	38
4. 청소년복지 및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	47
제3장 19대 국회의원 대상 차기정부 정책방향 의견조사 결과	61
1. 조사 개요	63
2.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67
3. 청소년정책 시급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73
4. 조사결과 시사점	79
제4장 향후 청소년정책 방향과 주요과제	81
1. 청소년정책 추진 핵심키워드	83
2. 향후 청소년정책 주요 추진 과제	85
참고 문헌	93
부 록 : 제19대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표	97

표 목 차

〈표 II-1〉 이명박 정부 청소년정책 4대 비전	9
〈표 II-2〉 학교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비교	14
〈표 II-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현황	17
〈표 II-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18
〈표 II-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	18
〈표 II-6〉 연도별 청소년문화존 지원현황	19
〈표 II-7〉 2012년 전국 시·도 별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현황	20
〈표 II-8〉 연도별 청소년동아리 지원현황	21
〈표 II-9〉 2012년 시도별 청소년동아리 지원현황	21
〈표 II-10〉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22
〈표 II-11〉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등록회원 수(누적)	23
〈표 II-12〉 연도별 수련활동인증 실적 및 참여청소년 현황	24
〈표 II-1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포상단계별 최소활동기간과 성취목표	25
〈표 II-1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현황	26
〈표 II-15〉 국가간 교류사업 연도별 초청 및 파견 현황	30
〈표 II-16〉 국가간 교류사업 약정체결국 현황 (대륙별)	30
〈표 II-17〉 한·중 특별교류 현황	31
〈표 II-18〉 한·중·일 우호의 만남 개최 현황	32
〈표 II-19〉 청소년 해외조사·연수단 파견 실적	33
〈표 II-20〉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실적	33
〈표 II-21〉 청소년 해외테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34
〈표 II-22〉 2011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35
〈표 II-23〉 연도별 국제회의 및 행사에 대한 청소년파견 실적	35
〈표 II-24〉 청소년 참여기구 개요	39
〈표 II-25〉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반영실적	42
〈표 II-26〉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제안 및 수용 현황	42

〈표 II-27〉 시·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현황	43
〈표 II-28〉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	44
〈표 II-29〉 시·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현황	45
〈표 II-30〉 연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45
〈표 II-3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황	51
〈표 II-32〉 청소년유해업소 증가 현황	52
〈표 II-33〉 청소년유해업소 업종별 현황	52
〈표 II-34〉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점검결과(’11.12~’12.3)	55
〈표 II-35〉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 기준 요약	55
〈표 II-36〉 청소년유해매체 단속 및 적발 현황 (’10년~’12년)	56
〈표 II-37〉 YP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현황	58
〈표 III-1〉 소속정당별 응답율	64
〈표 III-2〉 정책적 우선순위 평가대상 청소년 환경변화 목록	65
〈표 III-3〉 시급성 평가대상 정책목표 목록	67
〈표 III-4〉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 환경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결과 (1-3순위 전체)	68
〈표 III-5〉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 환경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 평가결과 (1,2,3순위 간 가중치반영)	71
〈표 III-6〉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정책목표별 시급성 평가결과 (전체 순위)	73
〈표 III-7〉 기타 개별의원별 정책 제안 내용 요약	78
〈표 IV-1〉 청소년정책 핵심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표	86
〈표 IV-2〉 SWOT 분석에 기초한 네 가지 청소년정책 핵심전략	87

그림 목차

【그림 II-1】 이명박 정부 청소년정책 5대 영역별 중점과제 및 비전	10
【그림 II-2】 UN 공공행정상 수상보도 내용	11
【그림 II-3】 또래상담사업 추진 성과	12
【그림 II-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참여인원	22
【그림 II-5】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28
【그림 II-6】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도	38
【그림 II-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선정 및 정책과제 제안 절차	41
【그림 II-8】 청소년 보호정책 및 법령개정 추진현황	48
【그림 II-9】 청소년 음주 흡연을 추이	53
【그림 II-10】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추진체계	57
【그림 II-11】 청소년보호 YP 프로그램의 개념도	57
【그림 III-1】 정당별 제19대 국회구성비율과 본 조사응답율 비교	65
【그림 III-2】 청소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제19대 국회의원 전체)	68
【그림 III-3】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새누리당	69
【그림 III-4】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민주통합당	69
【그림 III-5】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통합진보당	70
【그림 III-6】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자유선진당	70
【그림 III-7】 소속정당별 우선순위 선정비율 비교 결과	71
【그림 III-8】 정당간 청소년 환경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 차이(가중치 분석)	72
【그림 III-9】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정책목표별 시급성 평가결과	74
【그림 III-10】 소속정당별 청소년정책목표 시급성 평가: 새누리당	75
【그림 III-11】 소속정당별 청소년정책목표 시급성 평가: 민주통합당	75
【그림 III-12】 소속정당별 청소년정책목표 시급성 평가: 통합진보당	76
【그림 III-13】 소속정당별 청소년정책목표 시급성 평가: 자유선진당	76
【그림 III-14】 정책안건별 시급성 평가점수의 정당간 비교 결과	77

【그림 Ⅲ-15】 기타 개별의원별 정책 제안: 소속정당별 비교	79
【그림 Ⅳ-1】 청소년정책 추진 핵심키워드	8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정책은 1990년대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다.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생겨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졌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벌이는 지도인력이 생겨났다. “덕·체·지의 조화”를 내걸고 10년간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한국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은 법·제도·인프라를 갖춘 국가정책의 하나로 위상을 정립해 왔다.

청소년정책이 이처럼 제도적인 외곽을 갖추고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성장해 왔으나 그동안 청소년정책의 공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정책의 목표였던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주관부처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정책을 살펴보고 2013년부터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는데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주관부처가 이관되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을 보기 전에 청소년정책은 다시 여성가족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두 차례에 걸친 주관부처 이관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특히 5년간 장기적인 정책 추진 계획으로 제시된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희망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 ‘제4차청소년정책(수

* 이 장은 김기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정·보완)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바뀌었고 새롭게 이관된 중앙부처의 입장과 부처 특성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해 오면서 지난 5년 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연구는 우선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공과 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¹⁾ 이어서 새롭게 개원된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후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1) 이명박 정부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청소년정책비전 및 추진체계, 청소년 활동정책, 청소년 참여정책, 청소년 복지정책, 청소년 보호정책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주로 여성가족부 이관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차기 정부 청소년정책 제19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이 연구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입안·수행된다는 점에서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본 조사의 내용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문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과 제안을 묻는 것으로, 2012년 6월 11일~22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0%인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차기 정부 청소년정책 비전 및 정책 방향 제시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성과 및 한계 분석,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및 청소년

1) 이 부분 원고는 요약문 형태로 청와대에서 추진한 「국정운영종합백서」 여성·가족·아동·청소년정책 편에 포함 되었음을 밝힌다.

실태 분석,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진단에 기초한 SWOT 분석을 토대로 차기 정부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부처의 업무보고자료,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관련된 보고서,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논문 등에 대한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0%인 120명이 응답하였으며 새누리당 60명, 민주통합당 52명, 자유선진당 2명, 통합진보당 4명, 무소속 2명 등이었다.

3)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이 연구는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19개 국회에 청소년 정책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2012년 7월 6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장근영 박사가 “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기현 박사가 “향후 청소년정책 방향과 주요과제”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토론자로 김광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광호 경기대학교 교수, 최원기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제 2 장

이명박정부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청소년정책비전 및 추진체계의
성과와 한계
2. 청소년활동정책의 성과와 한계
3. 청소년참여정책의 성과와 한계
4. 청소년복지 및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 2 장

이명박 정부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청소년정책 비전 및 추진체계의 성과와 한계

1) 청소년정책비전의 개요

표 II -1 이명박 정부 청소년정책 4대 비전

모 토	내 용
선제적 청소년정책	○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청소년정책의 국가정책 우선순위 부여 ○ 범부처 차원의 연계·발전과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포괄적 청소년정책	○ 문제 청소년 대상 정책에서 벗어나 다수 청소년을 대상 ○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와 참여에 기초한 정책 수립·추진 ○ 기존의 13-18세 중심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9세~24세)에 포함된 모든 연령대의 청소년을 포괄 ○ 정책대상에 있어 전기와 후기 청소년 비중 증가 ○ 후기 청소년 비중 증가에 따라 청소년 참여역할 강화
균형적 청소년정책	○ 청소년 활동·복지·자립·보호 등 정책 영역 전반에 고르게 정책역량 부여 ○ 구체적으로는 역량(competencies)의 강화라는 목표로 표현 ○ 청소년의 성장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정책서비스 지원
실질적 청소년정책	○ 정책효과의 체감도 향상을 주요목표 ○ 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정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강화사업 추진

* 출처: 여성가족부(2012c).

이명박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임기 초반 주무부처의 이관과 함께 변동이 있었으나 2010년 이후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 배정된 이후 선제적 청소년정책, 포괄적 청소년정책, 균형적 청소년정책, 실질적 청소년정책 이라는 4가지 기준을 골자로 한 정책비전을 수립, 추진되어 왔다. 이를 간단히 기술하자면 아래와 같다.

* 이 장은 장근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비전을 기초로 청소년의 역량강화, 참여 및 권리 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추진체계 강화라는 5대 정책 영역에서 총 15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해왔다. 5대 영역별 중점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	
목표	■ 청소년이 자립할 때까지 필요한 역량 함양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정책 과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출처: 여성가족부(2012c).

【그림 II-1】 이명박 정부 청소년정책 5대 영역별 중점과제 및 비전

2) 청소년정책비전의 성과

청소년 총괄정책비전의 성과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기술하자면 아래와 같다.

(1) UN 공공행정상 수상

청소년 참여사업 성과의 정책실효 제고 노력으로 2012년 6월 25일 UN공공행정상(PSA:Public Service Awards)을 수상했다. UN공공행정상(PSA:Public Service Awards)은 UN이 공공행정을 세계에 알리고 공공행정의 개선을 위해 2000년에 제정, 2003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상이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도 UN공공행정상 정책결정 참여부문에 ‘대한민국 청소년정책 : 정책수요자가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선진행정’을 내용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추천을 통해 응모했다. 심사결과, UN으로부터 청소년 참여·체험기회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 창의적 역량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예방·지원체계 강화 및 유해환경 조기차단을 통한 청소년 보호 내실화, 정책추진 기반강화를 통한 청소년정책 실행 2성 제고 등을 주요공적으로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우수성 홍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성신문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

유엔 공공행정상 정책결정 참여' 부문 수상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이 세계에
서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여성가족
부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이 유엔
에서 주관하는 유엔공공행정상
(PSA: Public Service Awards) 정
책결정참여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
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 세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모한 1344건 중 세계 각국 전문

가들로 구성된 유엔공공행정전문
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됐다.

여성가족부의 유엔공공행정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법무부, 서
울시, 경기도 등이 상을 받았지만
정책결정참여 부문 수상은 여성가
족부가 최초다.

청소년 정책은 그동안 문화체육
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
지부 등을 거쳐 2010년 여성가족
부로 이관되며 많은 변화를 겪어왔
다. 이관 이후 여성가족부는 청
소년복지지원법을 전부개정하고 지
역사회 청소년 통합안전망(CYS-
Net) 확대 및 위기 청소년 발견체
계 강화보다 보다 촘촘한 청소년 안
전망을 구축했다. 특히 청소년특별
회의, 청소년정책지역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을 정책 과정에 직접



공공행정 국제적 최고 권위의 상 수상 통보
(5.8, MBC, 중앙일보 다수 언론보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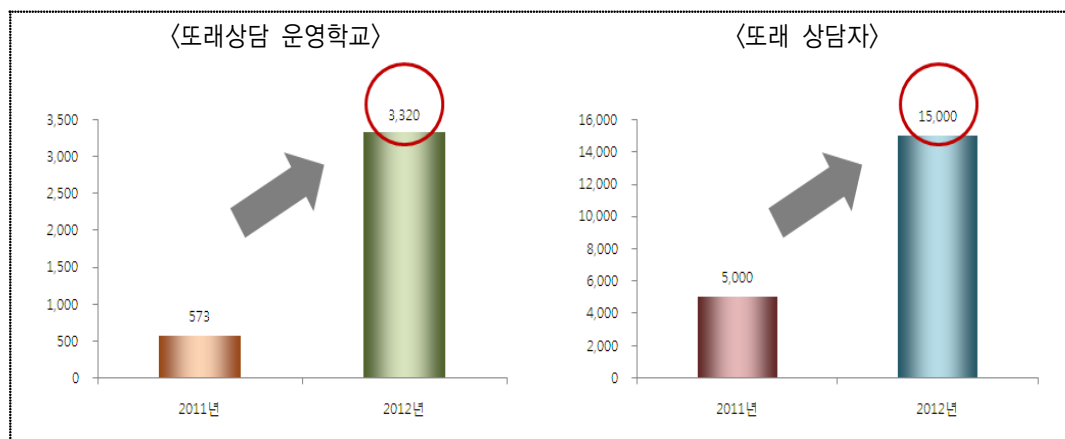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기관·단체의
지지 및 수상 홍보

【그림 II-2】 UN 공공행정상 수상보도 내용

(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인력·재정 확보로 이행 추진

2011년부터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교 및 또래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요원을 지원(34명)하여 긴급 상담에 대응하였다. 117 센터의 신고건수는 2011년 1월 616건 → 2월 1,124건 → 3월 2,386건 → 4월 3,592건 → 5월 6,400건으로 급증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의 상담인력 확충(32명→52명)을 통해 채팅 상담을 100% 수용하고, 실시간 상담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건강한 또래관계의 형성 지원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또래상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에 확대(‘11년 573개교→’12년 3,320개교)하여 동료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정책의 목표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2c).

【그림 II-3】 또래상담사업 추진 성과

(3) 학업중단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전국 확대 실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교육·사회분야 장관 간담회(2.13)를 통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골자는 자퇴 전 최소 2주간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절도, 폭력, 성매매 등 비행·범죄로 이행되는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학습지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4)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12~) 대비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신규 실시 등 프로그램 확대·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신규 실시(총 1120명), 또래 멘토와 취약청소년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시범운영(약480명),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44개 수련시설, 100개 학교)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국립청소년수련원(3개소)의 취약계층 청소년, 가족 등 대상 주말 캠프(1박2일) 운영(88회 11,000여명 추진)과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398개소)의 토요일 상설 운영을 통해 문화, 예술, 역사, 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012년 3월 참여자가 117천명에서 4월에는 229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토요일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수업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2011년에는 토요일 격주로 실시하던 것을 '2012년부터 매주 실시, 운영장소도 20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5) 청소년 보호 및 역량개발을 위한 민·관 융합행정 추진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하여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및 '청소년 무료 상담전화 1388'를 홍보, 전국 295개소 철도 역사 맞이방 및 승강장 내 3,632개 전광판 홍보문 표출(연중, 무료)하고 있으며,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험활동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주)에스원과업무협약(MOU) 체결(5.8)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총 480명)이 6월부터 토요일 안전체험활동 및 방학 중 1박2일 안전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유통업체(전국 26,400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 25,000여개), 시민단체와 공동협약(MOU) 체결(4.23)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 개선을 위해 5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산림청)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업무협약(MOU)을 체결(5.17)하여 각 기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위한 캠프형 원스톱 프로그램(인터넷 어린이 수비대 숲캠프) 개발·운영하였다.

3) 청소년정책비전의 한계

이명박 정부 청소년정책비전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 학교중심의 정책자원 투여

포괄적 청소년정책 추진의 기초 하에 위기청소년 중심의 정책목표를 일반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도 청소년정책 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집중된 상황은 변함이 없어서 많은 정책자원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투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학업중단청소년이 연간 7만여명 발생하는 현실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했다.

표 II-2 학교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비교

구 분	학 교 내 청 소 년	학 교 밖 청 소 년
1인당 지원액	(중 학 생)4,454천원, (고등학생)5,923천원	24천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지원 정책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특히 필요한 직업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체계적·종합적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업중단청소년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및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대안을 마련 중이다. 그 외에 학습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전국에 확대 보급하여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시도하려는 상황이다.

(2) 정보통신문화의 성장과 규제 사이의 불균형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달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정보통신분야는 차세대 주요성장동력의 하나로서 전폭적 지원의 대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에 포함된 인터넷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정책요구가 존재해 왔으며 이는 특히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게임분야의 질적·양적 성장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촉기회가 증가하면서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강조되었고 특히 스마트폰 및 SNS 등 새로운 매체의 확산과 함께 정보의 유통경로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 되면서 부수적으로는 기존제도로 규제가 어려운 유해정보의 유통도 증가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성장과 규제라는 서로 상반되는 정책요구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는 주로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IT 기기와 매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유해매체 감시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신종매체물에 대한 유해정보 유통현황 점검 및 단속 실시 등을 추진했다. 또한 게임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온라인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강제적 규제도 강화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추후 ‘청소년 보호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인적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정책투자의 부족

선제적 청소년정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의 인적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필수적이다. 전문적 역량과 자원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선제적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부정확한 예측과 대응정책 남발로 오히려 정책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선제적 정책대응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학교중심의 예산 편중도 원인이었으나 학교밖 청소년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른 분야 정책들의 요구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는 애초의 정책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정책투자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기관 내 전담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적기 대응에 실패했다. 실제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담인력이 없어 청소년에 대한 적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2012년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417명('12년 양성 목표(400명) 대비 104% 달성)의 수료자를 배출하는 등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시의적 상담·치료서비스를 위한 상담기관 내 전담 전문인력 확대양성 및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채우는 열악한 예산에 어울리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체험활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다양한 역량개발 등을 위한 체험활동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시설당 청소년 인구는 13,940명으로 일본의 2.6배, 프랑스의 28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생활권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규모 공공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12년 건립 27개소, 기능보강 39개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아 이용빈도가 높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환경·농업생명 전문체험시설인 국립 영덕·김제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하여 2013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의 지원과 함께 보다 실효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없이는 이의 실효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2. 청소년활동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청소년활동정책의 성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 5일제 수업 실시와 함께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발굴·지원 등, 다양한 유형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해 왔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각각의 활동 유형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 제공·급식·건강관리·상담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보호를 통한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5년 46개 지역 2,4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정부 출범이후에는 2008년에 185개로 사업규모를 확대되었다. 사업의 높은 효과성 및 지역사회의 설치 요구 증대를 고려하여 2012년 현재에는 200개소로 사업규모를 확대되었으며, 추진사업내용의 측면에서도 타 방과후 사업에 대비하여 높은 효과성을 나타내고 우수사례를 제공하여 2011년에는 국정 과제 중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표 II-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원(개소)	100	151	185	178	161	200	200
참여인원(명)	4,200	6,300	7,980	7,560	6,804	8,200	8,200
예산(억원)	77	120	150	129	121	154	154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특히 2011년에는 「청소년기본법」이 되면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국가적인 청소년방과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영역개발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본형의 경우 시설당 40명(반당 20명 구성)씩 1일 5시간 내외 운영, 주 6일 운영(토요일 운영), 방학 운영하게 된다. 지역적 수요를 고려하여 확대형(60명), 지역형(30명)으로도 운영된다. 2012년에는 학교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됨에 따라 방과후아카데미를 주6일 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 참여 청소년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자녀와 부모의 실직·파산·장애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 4학년에서 중등 2학년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아카데미 사업의 대상인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고학년과 중등저학년의 경우 사회적으로 방과후 관련 적절한 전문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본 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아카데미 운영 장소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전용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관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총 20개의 운영모형이 제공되며 이중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운영모형을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최근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질이 담보되는 과정 개설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특별지원(장애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형 등을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의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아카데미 전담인력(PM, SM)을 아카데미 지도자로 배치 운영하며, 추가적으로 전문프로그램 강사지원, 자원봉사 인력풀 운영 등을 운영한다. 전담인력의 경우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를 의무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구 분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지 원 형			일반형 (시범)	혼합형 (시범)	지 원 형			일반형 (시범)	혼합형 (시범)
	기본 지원형	농산 어촌	특수 청소년			기본 지원형	농산 어촌	특수 청소년		
수련시설중심 (A형)	A-1 모형	A-2 모형	A-3 모형	A-4 모형	A-5 모형	A-6 모형	A-7 모형	A-8 모형	A-9 모형	A-10 모형
지역사회연계 (B형)	B-1 모형	B-2 모형	B-3 모형	B-5 모형	B-5 모형	B-6 모형	B-7 모형	B-8 모형	B-9 모형	B-10 모형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표 II-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전문체험활동 과정	·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 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 토요일 : 주5일제 관련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과정 (기본공통과정)	보충학습지원과정 (자기주도학습)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교과학습과정 (주요교과목지원)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자율체험활동 과정 (재량활동과정)	·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 활동의 성격으로 담당 실무자들이 직접 운영(지역사회 연계하여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는 등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각 운영기관에서 재량으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습지원의 성격 운영 불가
특별지원과정 생 활 지 원	청소년캠프(방학), 부모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2)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은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 2004년 주5일 수업제가 월 1회 시범 운영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문화존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현정부 들어서부터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청소년문화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1개 문화존에서 16개 시·도별 대표문화존, 90개 시·군·구 문화존으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2011년도부터는 16개 대표 문화존과 110개 시·군·구 문화존으로 운영·지원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I-6 연도별 청소년문화존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합계	5,984	5,984	5,984	4,930	6,000	6,400
	국비	2,992	2,992	2,992	2,465	2,400	2,800
	지방비	2,992	2,992	2,992	2,465	3,600	3,600
지원 규모	합계	41개	106개	106개	106개	126개	126개
	대표	-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시·군·구	-	90개	90개	90개	110개	110개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표 II - 7 2012년 전국 시·도 별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대표문화존		시군구 문화존	
	개수	금액	개수	금액
합계	16	640,000	110	1,760,000
서울	1	40,000	11	176,000
부산	1	40,000	6	96,000
대구	1	40,000	7	112,000
인천	1	40,000	4	64,000
광주	1	40,000	5	80,000
대전	1	40,000	4	64,000
울산	1	40,000	2	32,000
경기	1	40,000	20	320,000
강원	1	40,000	6	96,000
충북	1	40,000	6	96,000
충남	1	40,000	7	112,000
전북	1	40,000	6	96,000
전남	1	40,000	6	96,000
경북	1	40,000	8	128,000
경남	1	40,000	11	176,000
제주	1	40,000	1	16,000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 및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으로 정부는 전국 시·도 별 청소년시설 및 각급 학교의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우수 청소년 동아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는 청소년동아리(60개 동아리, 300백만원) 활동지원이 민간보조사업의 형태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현정부 출범이후인 2008년부터는 975개 동아리에서 2,000개 동아리로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II-8 연도별 청소년동아리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합계	1,418	2,000	2,000	1,700	2,000	2,000
	국비	975	1,000	1,000	850	800	800
	지방비	443	1,000	1,000	850	1,200	1,200
지원규모		1,418	2,000	2,000	1,700	2,000	2,000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표 II-9 2012년 시도별 청소년동아리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동아리		구분	동아리	
	개수	금액		개수	금액
서울	412	164,800	강원	60	24,000
부산	152	60,800	충북	62	24,800
대구	110	44,000	충남	78	31,200
인천	112	44,800	전북	74	29,600
광주	68	27,200	전남	68	27,200
대전	68	27,200	경북	104	41,600
울산	46	18,400	경남	124	49,600
경기	440	176,000	제주	22	8,800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3)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1995년 5월 교육부의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과제로 포함되는 것을 계기로 1996년 2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지원되었다. 2006년에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을 하여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확대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은 꾸준히 활성화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가 2007년 2,362천명에서 2011년 2,64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청소년 자원봉사 터전 역시 2007년 3,657개소에 2011년 8,620개소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청소년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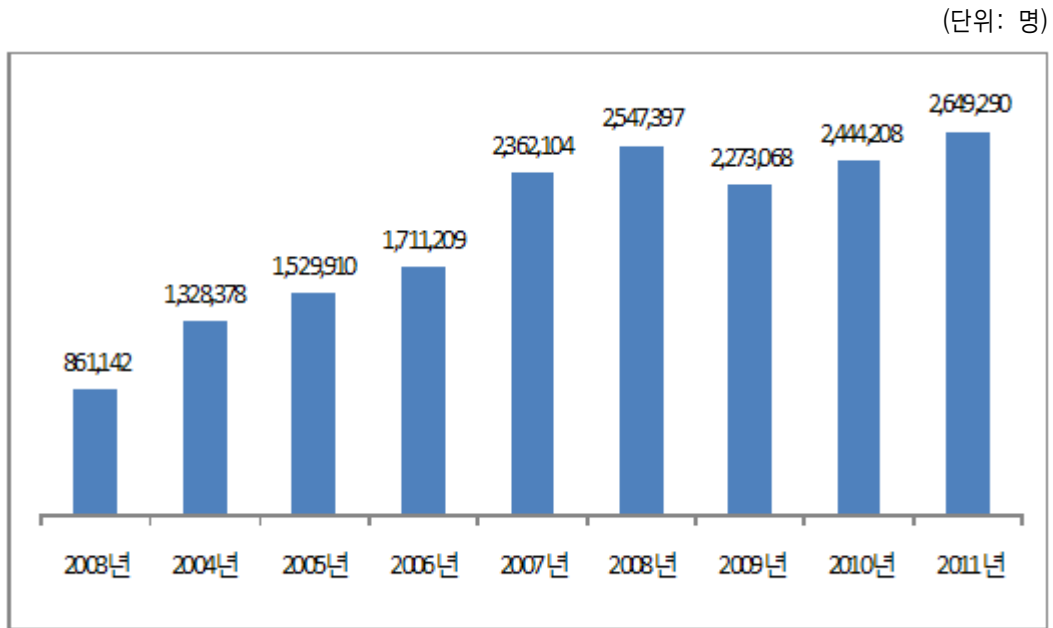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10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단위 : 건)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가입 터전 수	2,752	3,657	4,635	6,802	8,053	8,620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그림 II-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참여인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년에 개발한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을 2008년에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기능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 지역별로 운영·관리 되었던 시스템을 인터넷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봉사활동 포털사이트(www.dovol.net)로 개편하여 청소년봉사활동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 등을 꾀하였다. 따라서 시·도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을 이용하는 편리성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봉사활동 포털사이트의 회원수는 2007년 490천명에서 2011년 1,453천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운영프로그램도 2007년 123천건에서 2011년 158천건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청소년봉사활동 대표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다.

표 II-11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등록회원 수(누적)

(단위: 명)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회원 등록 수	294,158	490,737	687,912	876,025	1,161,356	1,453,465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또한 2012년에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또래청소년들의 상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또래멘토링 봉사활동”을 13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향후 청소년 또래멘토링 봉사활동은 취약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서비스 수혜자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책임과 권리를 지닌 시민의식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이다. 현정부 출범이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누적 인증건수가 2007년 363건에서 2011년 1,569건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참여청소년도 2007년 8,734명에서 2011년 50,323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등에 따라 청소년 여가시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로 중요한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283명의 활동 전문가를 현장에 인증프로그램 효율화에 활용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인증제도 홍보와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을 시범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제2기 인증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 전문가회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할 수 있는 하였다. 또한 청소년관련학과를 설치한 전국 9개 대학과 대입시 가산점 반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에는 참여청소년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활용 가능한 포트폴리오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6개 대학과 추가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입학시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수련활동인증제도의 인증신청·절차 간소화, 인증 프로그램의 보급·확대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11개 대학과 추가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입학시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II -12 연도별 수련활동인증 실적 및 참여청소년 현황

구 분(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인증활동	인증(건)	79	284	443	255	266	242	1,569
	취소	4	-	-	-	-	-	4
	철회	12	8	4	-	-	-	24
	만료	13	187	3	-	-	-	203
	유지(건)	50	89	436	255	266	242	1,338
참가청소년(명)		353	8,734	13,659	18,578	38,852	50,323	130,499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 전국 26개 대학교 업무협약체결(수련활동인증기록 활용), * 공공 2개 기관 업무협약체결(전남도청, 전남교육청)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영역별 참여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입증하여 인증수련활동의 객관적 가치를 제시하기 위하여 2008년에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연구 지표를 개발하였고, 2009년에는 참여 청소년 69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이어서 2010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74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의 글로벌리더십, 교육의 적극성, 문화예술이해, 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사회적책임감, 자연친화성, 자기이해, 직업의식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이하 '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4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80만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국제 청소년 성장 활동 프로그램이다. 포상제의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8개월), 금장(12~18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포상기준으로는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과 성취목표가 제시된다.

표 II-1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포상단계별 최소활동기간과 성취목표

구 분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합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 한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 활동은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활동 주기는 7일 간격을 유지해야 함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포상제는 비경쟁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과정 중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상제는 참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기존 청소년활동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에는 국가운영기관(National Award Authorities, 61개국)과 독립운영기관(Independent Operators, 70개국)이 속해 있으며, 유럽·지중해·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지역에 사무국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2008년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독립운영기관 자격(주관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취득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다음 단계인 임시회원국가(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2년 정회원국가 자격 취득을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 행사 개최 등으로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에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10.24~10.30)하였다.

제도 도입 후 중앙 사무국과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범국가적 활동 지원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포상활동 온라인 기록관리 시스템 (www.koraward.or.kr)을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참가청소년이 2008년 352명에서 2011년 10,039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운영기관도 2008년 15개 기관에서 2011년 732개 기관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자기주도적인 체험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2011년 저 연령(만 9~13세) 대상 한국형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표 II -1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명, 개)

구 분	참가 청소년	포상 청소년	포상담당관	운영기관
2008년	352명	-	162명	15개
2009년	2,139명	398명	1,198명	194개
2010년	4,169명	457명	1,830명	309개
2011년	3,379명	431명	1,289명	214개
누적 계	10,039명	1,286명	4,479명	732개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 주: 2008년 시범사업 시행으로 7월부터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 졌으며, 포상을 받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인 '동장'도 최소한 평균 7~8개월이 소요되므로 2008년에는 포상 청소년이 없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2011년 참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4.3% 증가하였고, 삶에 대한 만족도 5.6%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 청소년에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임이

증명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6)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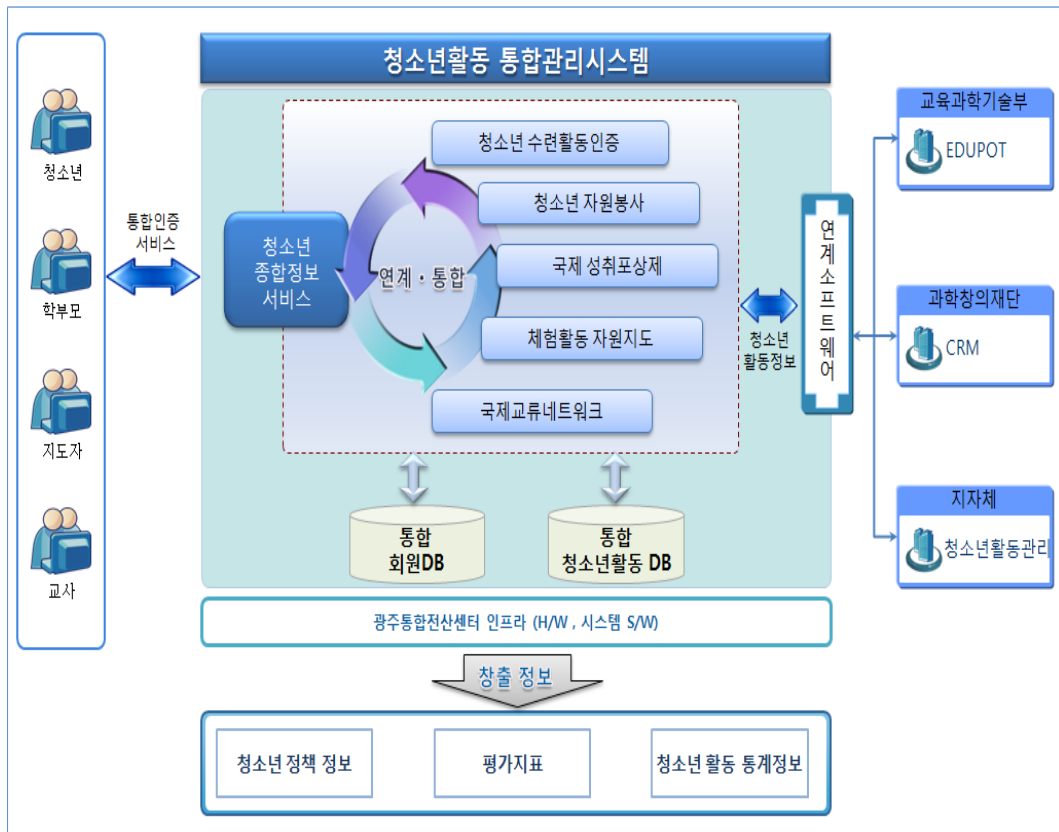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6월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재량으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고시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외 활동의 실효성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내용을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활동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고한 영역별 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각 학교에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으로 재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2011년 초 1, 2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초1~4학년, 중 1~2학년, 고 1~2학년, 2013년도에는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1년도 8월부터 16개 시·도에 88개(광역 10개, 거점 78개)의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5월 18일 ‘청소년 체험활동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5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2009 개정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연계·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7월에는 창의적체험활동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창의체험자원지도 제작 및 시범사업 참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창의적체험활동 추진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시달하였다. 또한 2010년에 창의·인성교육넷(CRM)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자원지도(YRM)’를 구축하였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봉사활동 등에서 각각 운영되고있는 활동기록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edupot)’과의 연계를 위한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2c)

【그림 II -5】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2011년에는 청소년활동의 개별사이트인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교류네트워크, 청소년체험활동자원지도의 사용자를 통합하였고, 2012년에는 6개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6개 사이트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고 프로그램 검색 및 예약기능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체험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지역기반 청소년체험활동 시범사업을 서울 노원지역과 경기 수원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2개 수련관, 6개교, 1,592명 참가),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중심의 사례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였다.(중앙, 평창, 고흥 국립수련원, 강원·충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개 학교).

2012년에는 44개 청소년수련시설과 100개 학교가 참여하는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 학교와 청소년활동 현장을 연계·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1년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연계 코디네이팅 연수’과정 개발 및 교육 실시(13회, 585명)로 향후 청소년체험활동 학교연계·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원한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전국단위 학교 요구조사를 통해 정책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청(학교), 청소년시설·단체, 기타 지역사회 시설·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창의적체험활동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였다. 청소년활동과 연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설명회 및 대상별 워크숍을 2011년 110회 8,465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고, 지역 내의 전문인력 양성 및 YRM 정보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7) 국가간 청소년교류 사업

글로벌 시대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국제 교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외국 문화를 체험하고 청소년간 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의 약정 체결을 통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국가간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국가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간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대상국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유적지 답사,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간 토론 등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간 청소년 교류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외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다문화 사회로서 변화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적응에 기여하며 청소년간 교류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세계 시민의식을 갖추 수 있게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 청소년 교류 파견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매년 초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인성, 참가동기, 어학능력, 사회봉사 활동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선발한다. 2008~2011년도에는 24개국에 약 2,502명의 청소년들이 상호 초청 파견되었다.

국가간 교류 사업은 청소년들의 공동 협력과 우의증진, 국제능력 및 사회참여의식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2008년도에 24개국 590명의 교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에는 22개국 647명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선진국, 자원보유국, 신흥강국 등으로 교류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에는 12.2%이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발 규모를 2011년에는 20%범위로 확대하였다.

표 II-15 국가간 교류사업 연도별 초청 및 파견 현황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획)
총인원	590명	618명	647명	647명	678명
국가수	24개국	22개국	24개국	22개국	22개국
초청인원	299명	311명	319명	324명	329명
파견인원	291명	307명	328명	323명	349명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표 II-16 국가간 교류사업 약정체결국 현황 (대륙별)

구 분	교류 약정국
총 31개국	
아시아 (10개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유럽 (10개국)	헝가리, 러시아, 핀란드, 프랑스, 체코, 폴란드,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중동 및 아프리카(9개국)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이스라엘, 수단, 파키스탄,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카메룬
중남미 (2개국)	칠레, 멕시코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8)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확대 합의와 '04.5월 한·중 청소년 교류약정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청소년 500명이 1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한·중 양국 청소년 교류, 역사 문화 유적지 및 산업시설 탐방,

가정방문 등의 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중국 측에서 매년 한국 청소년 100명을 초청하였다. 2009년에는 200명을, 2010년에는 400명을, 2011년에는 200명의 한국 청소년을 초청하기로 하여 2011년까지 총 4,859명(초청 3,795명, 파견 1,064명)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표 II-17 한·중 특별교류 현황

구 분	초 청				파 견			총 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총계				3,795	-		1,064	4,859
2004	198명 (7.21~7.30)	189명 (11.1~11.10)	100명 (11.17~11.26)	487	-		-	487
2005	192명 (7.6~7.15)	100명 (9.7~9.16)	191명 (11.15~11.24)	483	-		-	483
2006	96명 (5.24~6.2)	193명 (7.5~7.14)	200명 (11.1~11.10)	489	98명 (4.12~4.21)		98	587
2007	200명 (4.7~4.16)	100명 (6.13~6.22)	191명 (11.1~11.10)	491	97명 (7.3~7.12)		97	588
2008	154명 (8.18~8.27)	100명 (10.29~11.7)	150명 (11.5~11.14)	404	95명 (7.22~7.31)		95	499
2009	196명 (7.8~7.17)	99명 (9.16~9.25)	185명 (11.11~11.20)	480	96명 (5.13~5.22)	99명 (8.3~8.12)	195	675
2010	192명 (6.2~6.11)	100명 (10.13~10.22)	187명 (11.11~11.20)	479	192명 (5.11~5.20)	190명 (9.7~9.16)	382	861
2011	191명 (6.15~24)	98명 (9.21~30)	193명 (10.26~11.4)	482	197명 (5.7~26)		197	679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9)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3자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사업을 개시하였다.

2007년에는 중국에서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행사가 개최되어 한국 청소년 100명이 파견되었다. 2008년에는 일본, 2009년에는 한국, 2010년에는 중국에서 각각 행사를 개최되었다. 2012년 3월에 제5회 행사가 일본에서 개최되어, 한국 청소년 100명을 파견하였다.

표 II-18 한·중·일 우호의 만남 개최 현황

회 차	연 도	개최국	장 소	기 간	인 원
1회	2007	중국	베이징	8.16~22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2회	2008	일본	도쿄	9.17~23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3회	2009	한국	서울	7.21~27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4회	2010	중국	베이징	7.21.~27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5회	2012	일본	도쿄	3.11~17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10)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6년도부터 실시된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청소년 자율 프로그램 및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으로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해외체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기획된 동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해외 조사 연수단’, ‘꿈과 사람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 프로젝트, 해외테마체험단’ 등이 있다.

4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1개 팀을 이루어 외국의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 해외 한민족의 생활과

발전방향, 외국의 주요 국가정책 및 인적 자원 개발 사례, 진로 및 취업 관련 조사, 기타 청소년이 창안한 자유 주제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활동 주제를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선택 주제에 대해 스스로 준비를 갖춰 해외에 나가 조사 연수 활동을 펼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해외조사 연수단 프로그램은 주로 여름 방학을 이용해 2주 내외의 활동을 펼치게 되며 2008~2011년에는 1,121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팀을 이루어 조사 연수를 다녀왔다.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해 겨울 방학 및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8년 이래 2011년까지 2,618명을 파견하였다.

청소년해외테마체험단은 세계 주요 선진국가의 선도적 강점 분야 등의 체험 및 연수를 통해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 청소년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 과학 및 기술 연수, 독일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화해 워크숍, 터키의 전통 터키문화 교류 등이 있다.

또한 2009년도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모국 방문 프로젝트(베트남, 필리핀)’를 새로 시행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프로그램과 장애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저소득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었다.

표 II-19 청소년 해외조사·연수단 파견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참가 인원	269명	269명	300명	283명
팀 개수	71개팀	69개팀	75개팀	73개팀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표 II-20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참가 인원	630명	630명	654명	704명
팀 개수	38개팀	34개팀	34개팀	34개팀
파견국가수	12개국	20개국	12개국	11개국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표 II-21 청소년 해외테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연도별	실 적
2008	16개 프로그램 303명 참가 (프랑스, 영국, 독일, 터키, 스페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2009	15개 프로그램 284명 (필리핀, 프랑스, 호주, 페루, 독일, 터키, 스페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한국, 베트남)
2010	16개 프로그램 363명 (필리핀, 베트남, 미국, 일본, 몽골, 노르웨이, 호주, 독일, 터키, 뉴질랜드, 중국)
2011	18개 프로그램 454명 (뉴질랜드, 대만, 독일, 러시아,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터키)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11) 청소년 국제회의·행사 파견 및 개최 지원

정부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해외체험 욕구와 글로벌 시대의 국가정책 등에 부합되는 새로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가하고자 하는 국제회의나 포럼, 캠프 등을 조사하여 참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중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파견 보내는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 지원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하여 참가 계획을 지원하는 형태의 파견 외에도 정부 외교채널을 통해 초청되는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에도 다양한 청소년들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및 유엔 제3위원회에 청소년대표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대표 발언문을 낭독하는 등의 활발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19팀, 54명의 학생들이 싱가포르, 미국, 불가리아, 멕시코 등 총 10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파견하였다.

또한 국제회의 및 행사에 역량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파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격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83명의 청소년들을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 및 행사에 파견하였다.

국제청소년 행사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개최하는 아시아 청소년캠프와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광장,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등이 있다. 2011년에는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국제청소년포럼, 동북아청소년포럼,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아시아청소년지도자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표 II-22 2011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행사명	일 정	국내외 참가자 현황		주관기관
		참가국	인 원	
계			65,875명	
제13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11. 7월	20개국	10,000명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제22회 국제청소년포럼	’11. 8월	32개국	118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8회 동북아 청소년 포럼	’11. 8월	3개국	94명	MRA한국본부
아시아청소년 초청 연수	’11.7~8월	24개국	249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아시아청소년지도자 초청연수	’11.10월	7개국	40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수국제청소년 축제	’11. 7월	34개국	55,374명	전남 여수시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표 II-23 연도별 국제회의 및 행사에 대한 청소년파견 실적

연도별	총 파견 인원	파견 회의 및 행사명
2008	54명	유엔사회개발위원회 등
2009	85명	시스템 다이내믹 사회 국제컨퍼런스, 글로벌 모의유엔, 국제 청문회 청소년 캠프, 국제청소년 리더쉽 컨퍼런스, 런던 국제 청소년 과학 포럼,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에 대한 컨퍼런스, 칸 컨퍼런스, 청소년 어셈블리, 글로벌 건강과 환경, 아태평양 지역의 에이즈 관련 국제회의, SAGE 월드컵 경기, 국제 아동 축제, 말레이시아 국제청소년워크숍, 인도네시아 국제청소년캠프, 국제녹색여름캠프, 아셈 문화 청소년 캠프,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APEC 미래의 목소리, 원아시아 포럼, 국제 학생 축제, 2009 세계회의, 아시아 청소년 포럼, 세계화장실정상회의, 헤이그 국제 모의 유엔, 국제 환경, 문화,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유네스코 청년포럼, 유엔사회개발위원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사회개발의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및 아동의제

연도별	총 파견 인원	파견 회의 및 행사명
2010	85명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 칼폴리 저널리즘 워크숍, SAGE 월드컵 경기, 호비세계 리더쉽 회의, 런던 국제 청소년 과학 포럼, 세계 청소년 회의, 남극 대륙 정치 심포지움, 대학 장학생의 리더쉽 심포지움, 유엔 청소년 어셈블리, 유엔총회 제3위원회(사회개발 의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여성 및 아동 의제), APEC 정상회담-미래의 목소리, 국제 사 진 마라톤, 아세안+3 정상회의, IACE 캠프, 아세안+3 청소년 축제, WAY 세계총회 기념 국제회의, 일본 치어리딩 경기, 홍콩 100주년 챔 버리, 제11차 세계스카우트 유스포럼
2011	59명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국제 청소년 리더 컨퍼런스, 호비 세계 리더쉽 회의, 2011 셀리게르 국제 청소년 포럼, 유엔총회 제3위원회(사회개발 의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여성 및 아동 의제), 2011 필리핀 그린 캠퍼스 환경포럼, 던맨고 아시안 플러스 정상회담 2011, 2011 월드 어페어즈 세미나,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 유네스코 청년포럼, 국제환경청소년여름캠프, 국제청소년회의, 아시아 청소년의 집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2) 청소년 활동정책의 한계

이명박 정부의 청소년활동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다양성 확대와 양적인 증가다. 양적으로는 주5일제 도입과 창의적체험활동의 교과과정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보했으며, 질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입어 다양한 활동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용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의 증가는 매우 바람직했다.

청소년활동 정책의 한계점은 크게 지속성과 연계성, 그리고 목적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활동 정책추진의 통합성과 지속성

첫 번째는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추진의 미흡이다. 대개의 활동프로그램들이 일종의 시범운용 형식으로 개발되었고, 개발 단계에서는 일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으나 이후의 운영은 해당 지자체나 활동시설에 전담시킴으로써 시범적인 개발 실적은 높으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용 실적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2) 여가활용 중심의 활동정책

두 번째 한계는 청소년 청소년활동의 개발 및 운영 목표가 주5일 수업제도의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 여가의 활용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주5일 수업제도는 청소년활동의 수요를 증가시킨 외적 여건이었으므로 이는 일면 당연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 활동 인프라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청소년 활동이 추구할 방향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상과 역량’에 소홀해졌다는 비판도 받았다.

(3) 참여 청소년의 범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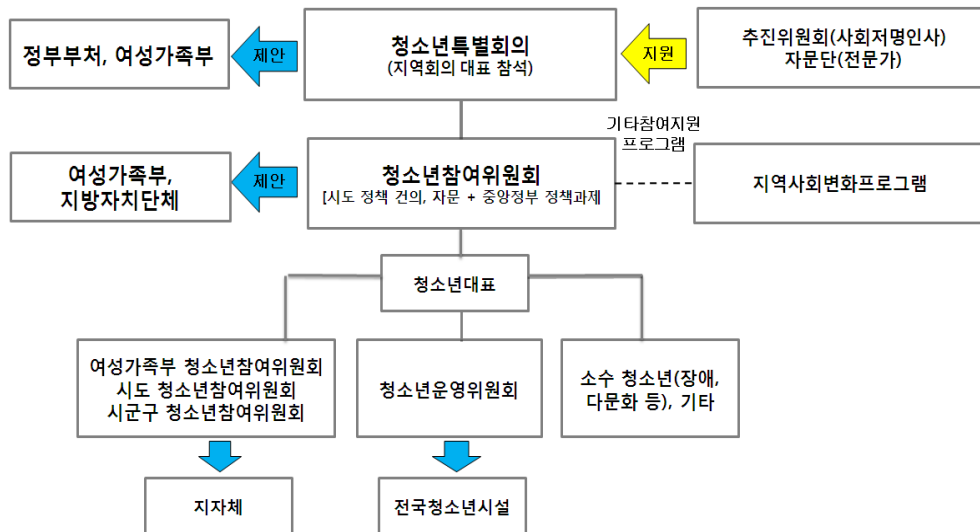
마지막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다양성과는 반대로 참여의 기회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 청소년들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소년 활동운영 시설의 수익성을 강조한 결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자체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비용이 증가했다. 지금까지 청소년활동 참가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참가비 증가는 당연하나, 그것이 특정 계층의 참가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신규 개발되는 활동프로그램들이 세분화되면서 이러한 활동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노력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부모의 청소년들은 참여기회가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3. 청소년참여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청소년 참여정책의 성과

정보화 및 사회전반의 민주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의지를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고자 ‘청소년참여기구’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 정부에서 수행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에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혁신적 행정체제인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하는 등 청소년 참여기구의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청소년참여기구는 지역 청소년시설·단체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 대표들이 직접 청소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의제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청소년특별회의」로 체계화되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2c).

【그림 II-6】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도

표 II-24 청소년 참여기구 개요

구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
기능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지자체 정책형성·집행과정 에 의견제시, 자문·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기획, 추진하는 프로그램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2조
경과	2005년부터 (매년 개최)	1998년부터 (매년구성·운영)	1999년부터 (매년구성·운영)	2007년부터 (매년 공모·운영)
규모	매년 400명 규모	'05년 111개 → '08년 163개 → '12년 185개	'05년 170개 → '08년 258개 → '12년 305개	'07년 39개 → '09년 25개 → '12년 60개

* 출처: 여성가족부(2012c).

2012년 현재, 전국단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와 185개 지역 참여위원회, 305개 시설·단체별 운영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순수 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청소년회의’를 설치하는 등 민간부문에까지 청소년 참여기구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8년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 내실화를 목표로 2010년 동 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청소년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를 주요 지표화하였으며, 특히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상 및 기능강화,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확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참여 활성화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 참여기구’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6년간 제안된 198건의 정책과제 가운데 86.4%인 171건의 정책과제가 정부 청소년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최근 7년간 청소년들의 참여인원을 파악한 결과, 2005년 5,484명에서 2011년까지 55,860명이나 참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청소년참여기구’가 국가미래를 이끌고 나갈 인재의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정부는 16개 시도와 분리되어 운영하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통합하여 전국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지자체 참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정부정책의 핵심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는 정부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정책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자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을 확대하고자 2009년부터 청소년참여포털(www.withyouth.go.kr)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인 facebook 페이지 개설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참여를 위해 다양한 참여통로를 열어주었다.

아울러 이러한 참여기구 활동 외에도 ‘청소년안전지대 J프로젝트’ 등 청소년들이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도 2007년부터 매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20개 내외의 프로그램만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74개팀, 2012년에는 60개 팀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수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세션」과 「UN 세계청소년포럼」 그리고 UN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 6월 뉴욕에서 한국은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격려하고자 UN에서 시상하고 있는 ‘공공행정상(UN PSA : Public Service Awards)’의 ‘정책결정참여’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 정책적 우수성을 UN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체계화·활성화 되는 가운데, 기관·단체·학계 등 현장의 지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청소년정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각 기구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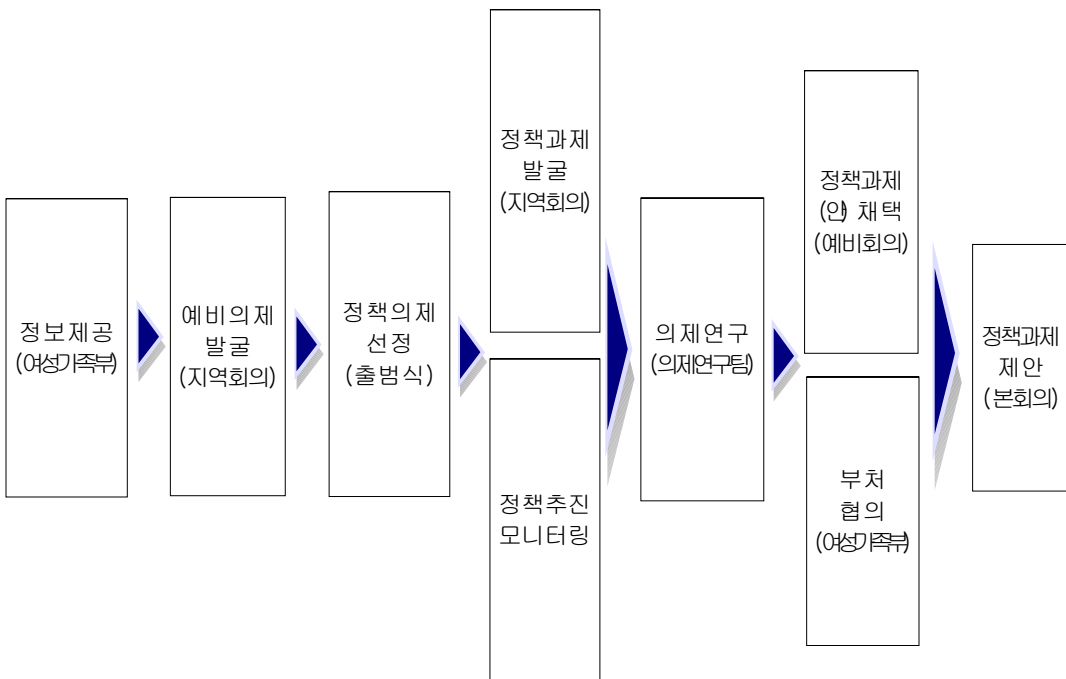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를 추진하는 참여기구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시설

중심의 지역 규모의 참여기구인데 반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동일한 정책의제로 함께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참여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대표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활동, 복지, 보호를 위해 선정한 지역 예비의제를 바탕으로 출범식 및 의제선정 워크숍에 참가하여 당해 연도 최종 정책의제를 선정한다.

미리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지역별로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발굴한 정책과제 및 의제연구를 활용하여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건의한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그림 II-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선정 및 정책과제 제안 절차

2010년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최근 5년간의 정책과제 제안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정책과제 이행률을 점검하였다. 제6회 특별회의의 정책과제를 포함한 6년간 제안된 198건의 정책과제 가운데 86.4%인 171건의 정책과제가 정부 청소년정책에 수용되었으며 179건이 수용되었다.

표 II-25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반영실적

(단위: 개)

연 도	제안과제수	수용	이행
2005	35	31	30
2006	37	33	35
2007	18	15	16
2008	35	29	31
2009	20	14	18
2010	53	49	49
계	198	171	179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표 II-26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제안 및 수용 현황

연도	의 제	수용률	주요참석인사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VIP, 영부인, 국무총리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영역 31 과제 수용	88.6%	국가청소년 위원장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89.2%	국무총리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83.3%	국가청소년 위원장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82.9%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실장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 (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70.0%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92.4%	여성가족부장관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6개 과제 수용	87.8%	여성가족부장관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2)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주무부처(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 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은 개인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186개(12.4.30 현재)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표〉 참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보통 10~30명이 이들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약 3,200여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현재 운영예산은 16개 시·도의 경우 매년 10백만원(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시·군·구의 경우 매년 3백만원(국비 1.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이다.

표 II-27 시·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현황

(단위: 개)

계	중앙부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6	1	6	3	2	10	2	2	6	32	19	5	16	15	23	23	20	1

* 출처: 여성가족부(2011a).

특히,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08년 163개소에서 2012년 현재에는 186개소로 지원개소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II-28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개소수	162	174	174	174	186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또한 ‘청소년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되면서 2012년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근거법령이 청소년기본법 제5의2로 개정하기도 하였다.

(3) 청소년운영위원회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위원회’, 중랑청소년수련관의 ‘21세기 청소년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설치되어왔다. 이후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설치가 확대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거나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12년 4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의 305개 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표〉 참조).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전국 약 4,1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

원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비해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이는 전담 지도자 배치나 시설 내 전용공간 확보 등 활동인프라가 청소년참여위원회보다 양호하다는 이유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의욕과 청소년 의견에 대한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12년 현재 운영예산은 운영위원회별 매년 2백만원(국비 1백만원, 지방비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지원이 가능하다.

표 II-29 시·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현황

(단위: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5	44	14	9	12	6	10	7	62	32	15	14	16	14	13	15	22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특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8년 258개소에서 2012년 현재에는 305개소로 지원개소수가 증가하였다.

표 II-30 연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개)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개소수	258	273	286	286	305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4)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

정부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전국청소년참여대회’ 등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주로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 보전, 기초 질서 지키기,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 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0년 공모를 통해 청소년관련 기관을 지원하던 ‘참여공모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0개 내외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해 74개팀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60개 팀이 지원을 받아 활동 중에 있다.

2) 청소년 참여정책의 한계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운영 등 청소년의 활발한 참여활동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되었으나,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여활동 수준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의견수렴의 장치로 활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참여인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참여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적인 참여 활동 활성화

국제 시민성 및 시민교육조사(ICCIS, 2009)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단체 참여율 4%로 36개국 평균(10%)보다 매우 낮으며 환경운동단체 5%(36개국 평균 29%), 인권운동단체 2%(36개국 평균 16%)도 36개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내에서의 참여 활동 역시 유사한데 같은 조사 결과 토론 참여는 33%로 36개국 평균(44%)보다 11%p나 낮으며, 학교운영의사결정 참여 역시 33%로 평균(40%)보다 7%p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은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활동이 많은 청소년의 보편적 활동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청소년 참여 활동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접근과 대다수 청소년들이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학교 내에서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2) 형식적 참여가 실질적 참여 활성화

청소년들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청소년 예산 참여제도)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핀란드의 「청소년의 목소리」나 브라질 바라만사시의 「어린이 참여예산평의회」 등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예산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복지 및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청소년 복지 및 보호정책의 성과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주변 환경은 음란·폭력성을 띤 청소년유해매체물, 각종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등의 광범위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흥주점 등 각종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출입이 빈번함에 따라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었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는 물론 정부, 언론·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총체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유해환경을 척결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복지 및 보호정책을 추진했다.

(1) 청소년보호법령 제(개)정

각 개별 법률에 산재하여 추진되던 청소년보호 업무를 단일 법률인 청소년보호법을 제정('97.3.7)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게 되었고,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17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쳤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과 유해약물, 신·변종유해업소의 증가 등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위험·유해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현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종합적이고 시의적인 대응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2011.9.15)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 및 신·변종 업소의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하였다.

〈시기〉	〈담당기구〉	〈주요기능〉
'85. 2 ~ '88. 6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 기획 시도, 문제 청소년 중심 소극적 행정
'88. 6 ~ '90. 9	체육부 청소년국	○ 청소년 보호·육성·선도·지원에 관한 조정·총괄 시도
'90. 9 ~ '93. 3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 선도·지도·보호·육성·교정·지원 등을 청소년육성으로 개념 및 내용 정립 ○ 문제청소년 중심 소극행정에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조장적 행정으로 전환 ○ 청소년기본법제정('91.12.31)
'93. 3 ~ '97. 7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3.9) ○ 청소년육성 중 청소년보호업무 별도 설정 ○ 청소년보호법제정('97.3.7)
'97. 7 ~ '98. 2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문체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국	○ 청소년보호위원회설치('97.7.7) ○ 청소년육성업무와 보호업무 명확히 구분
'98. 2 ~ '05. 4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8.7) ○ 청보위 총리실소속으로 분리('98.2.28) ○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03.12)
'05. 4 ~ '08. 2	(국가)청소년위원회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보위 통합,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소년위원회 설치('05.4.27) ○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변경('06.3.30)
'08. 3 ~ '10. 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통합
'10. 3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 ○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2011.9.15) ※ 2012. 9. 16일 시행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그림 II-8】 청소년 보호정책 및 법령개정 추진현황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예방·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 체계화

청소년들의 비행이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큼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을 둘러싼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9년부터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가 격년 주기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2006년에 국가승인통계로서 체계를 갖추었다.

2009년부터는 조사체계를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분야와 학교폭력, 가출, 성 등의 문제행동분야, 이와 관련한 일반배경 등 7개 분야로 체계화하고, 전국 170개 15,0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표본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주요 지표들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결과를 청소년정책분야의 다양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2011. 9. 15) 업소에서 유해약물 판매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담배, 주류 등 유해약물 구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류,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편의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감시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2011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의하면,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술 구매시 '19세 미만 판매하지 않음'(42.3%, '10년 대비 11.9%p 증가), '신분증 확인' (21.6%, '10년 대비 4.3%p 증가)으로 술 구입시 연령확인 정도가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 구입시 '연령 확인' 40.8%('10년 대비 2.0%p 증가), '확인하지 않음' 38%('10년 대비 3.9%p 감소)로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해매체물분야에서 자정 이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함으로써(2011. 11. 20 시행) 청소년들의 건전 인터넷 문화 정착 및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교실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또래상담자(청소년)가 동료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학생들이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 또래상담 운영 학교 : ('11) 573개교 → ('13) 희망하는 모든학교

* 또래상담자 : ('11) 5,000명 → ('13) 30,000명

(3)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추진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하여 성인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상업 지역내에 일정 지역을 위락 지구로 지정,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단화시킴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 정부의 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통하여 도시계획 수립시 유해업소 접촉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를 추진근거로 신도시 개발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를 시범도입(국토부)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하고 운영을 활성화(여성가족부)하였으며, 학교용지 선정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를 활성화(교육부) 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를 통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를 선정하였고 교육환경평가기준 재정립을 통한 근본적 교육환경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추진 경과를 보면 '07년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주상복합용지 등에 청소년유해업소 설치 불허 반영, 세종시 신도시 용도지구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상 위락지구 반영과 주요 신도시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신도시 격리·구획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0년 화성·동탄 2신도시 실시계획에 중심사업용지 등 4개 구역(총 면적 240,015km² 중 17천m²)에 한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청소년유해업소 건축을 허용하는 RED ZONE을 지정 격리·구획화하도록 반영 시범실시하게 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화성·동탄 2 신도시에 시범 실시 후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통하여 타 신도시 개발시 청소년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사업을 확대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지역중심 청소년유해업소 감시활동 강화

청소년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모두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의 사각지대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의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 및 유해환경정화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체로 1998년부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청소년단체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지정 받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합동조사와 계도 단속활동 수행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조직의 정체성과 구심체가 없이 개별적인 활동에 따른 감시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 및 낮은 공신력, 지역단위 협의체 부재로 감시단 결속력 부족과 체계적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감시활동 단체의 지정과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였다. 아울러 2012년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도별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협의회의 연대를 통한 전국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시·도 단위의 광역지역협의회 5개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II-3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황

(11.12.31. 현재,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0	56	18	8	10	8	5	7	58	13	8	17	10	13	9	15	5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표 II-32 청소년유해업소 증가 현황

(11.12.31. 현재, 단위: 개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68,689	760,386	789,468	796,113	803,114	812,327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표 II-33 청소년유해업소 업종별 현황

(11.12.31. 현재, 단위: 개소)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무도 학원 (무도 장)	이 용 업	숙 박 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 제공업계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장	일반 게임장	복합유 통게임 제공업
812,327	30, 287	15,139	591,591	78, 593	1,250 (88)	20, 688	30, 474	36, 659	1,207	526	3,075	781	2,057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 주: 1)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2) 고용금지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숙박업, 게임제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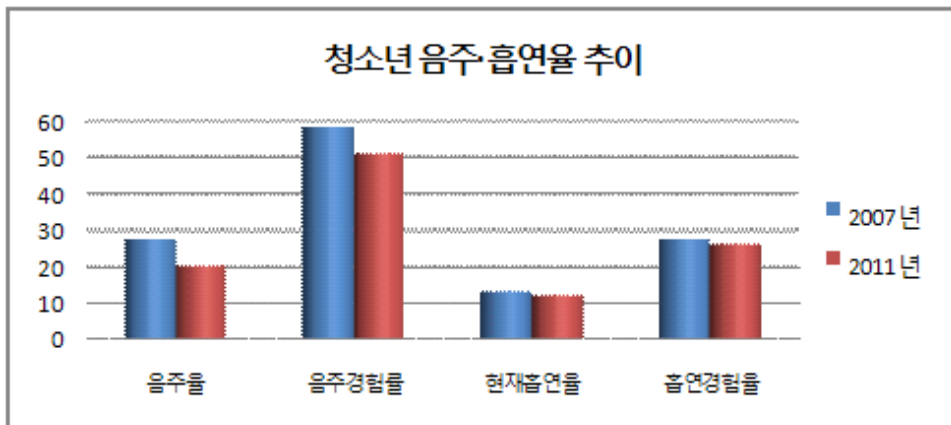
3) 일반음식점의 경우 전체업소 중 선술집, 소주방·호프, 카페 등(78,573개)이 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숙박업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6)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 음주·흡연에 대한 규제내용은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소년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청소년의 유해약물 접촉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음주·흡연 예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개정(2011.9.15)를 통해 주류·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류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개선하여 주류 용량에 따라 표기 기준을 정하는 등 누구에게나 눈에 잘 띄도록 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상대 판매실태 조사 및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최근 1년간 음주율”은 2008년 53.7%를 정점으로 2011년 35.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정상의 복합적인 환경요인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청소년 음주예방 공동 캠페인 선포식(2011년 7월13일)’, ‘수능 백일주 근절 캠페인’, ‘하계 해수욕장 음주예방 캠페인’, ‘청소년에게 술 권하지 않는 건전한 명절문화 만들기’, ‘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교육’ 등 연중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률이 2008년 12.8%에서 2011년도 12.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청소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은 건강에 해롭고 좋지 못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흡연연령이 저연령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흡연이 시작된 후 행태를 교정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흡연예방 놀이형 교구를 개발하여 전국 유치원(8,268개소)에 보급하였다. 놀이형 교구는 기존의 교사용 지침서에서 탈피하여 문자능력이 없는 영유아들이 주사위 놀이나 역할극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현장 교사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 자료: 보건복지부(2011),

【그림 II-9】 청소년 음주 흡연율 추이

(7) 청소년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지원

정부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음주·흡연예방 특성화 정책으로 각 위기 청소년 등 유해약물 접촉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상습 음주·흡연 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치료·재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상습 음주·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청소년활동전문가를 강사로 구성하여 신분증 위변조 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유발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청소년의 이해, 자녀와의 갈등해소법 등) 및 상담사를 통한 사후 멘토링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상습 음주·흡연 청소년 선도·보호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1,400명(70개교)에게 치료재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흡연예방교육(보건복지부, 교과부) 사각지대인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관리청소년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매년 950명),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연간 8,700명에게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상습 음주·흡연 청소년 선도·보호프로그램을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치료·재활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청소년의 자율적 역량강화를 병행한 입체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무료금연교실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추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또한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문제요인(가족갈등, 폭력성 등)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을 통해 기출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시너지 효과 발생을 촉진 하고 아울러 사업수혜자 금연·금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8) 청소년유해매체감시체계강화

①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2011년 11월부터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가 시행되어 만 16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제공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터넷게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추진은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가 관건인 바, 제도 시행 초기 3개월 동안의 점검결과에서는 90%이상의 게임물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II-34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점검결과(‘11.12~’12.3)

(단위: 건)

점검결과	준수	차단지연	차단미시행	합계
게임물 수(개)	287	24	3	314 (개)
비율(%)	91.4	7.6	1.0	100 (%)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② 청소년특정고시를 통한 청소년유해정보 유통차단

여성가족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고발조치·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해 왔다.

특히, 불특정인에게 유포되는 인터넷, 전단지 등의 청소년유해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통해 성인용품사이트, 성인화상채팅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2008),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2009), 키스방 등 성매매알선광고(2010) 등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였다.

표 II-35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 기준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명	내용	고시년도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2008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2009
키스방 등 성매매 알선광고	-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입맞춤(키스)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 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2010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를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키스방 전단지 등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키스방, 유리방, 전립선 맛사지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정보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였다.

③ 사이버유해환경 감시 및 사이버모니터링센터 구축

청소년유해매체환경의 감시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정보를 찾아내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에 ‘사이버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유해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다.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신종유해정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청소년보호법 등 법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청소년유해정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요청을 통해 청소년유해정보 유통차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표 II-36 청소년유해매체 단속 및 적발 현황 ('10년-'12년)

유형 및 형태	주요내용
음란동영상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	■ 2011년도 지정된 361개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인터넷 사이트 전 수조사 ■ 20개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조치
인터넷 신문 유해광고	■ 2,438개 인터넷 신문 유해광고 실태 및 위법행위 점검 ■ 62개 신문사 개선요청, 이 중 34개 사이트 시정조치
청소년유해약물 인터넷모니터링	■ 48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의 사이버 유통실태 점검 ■ 담배판매사이트(국내) 24개 및 전자담배사이트 47개 등 71개 사이트 경찰 수사의뢰 ■ 담배판매사이트(해외) 47개 및 전자담배 홍보/소개 사이트 42개 등 89개 사이트 청소년유해성 심의 의뢰 ■ 전자담배 기기류에 대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추진
자살 및 가출 정보 사이트	■ 포털사이트에서 자살 및 가출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점검을 통해 262건 삭제 및 블라인드 조치
성형외과 유해정보 점검	■ 성형외과 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통해 56개 업체, 61개 사이트에 대한 시정조치
유해업소	■ 26개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해업소사이트 고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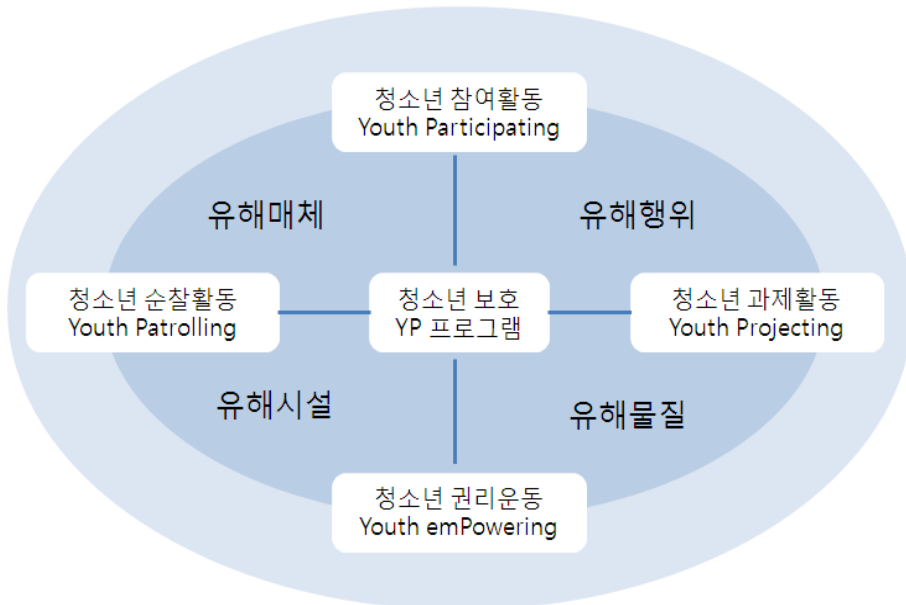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그림 II -10】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추진체계

④ 청소년 스스로지킴이(YP, Youth-Patrol) 활동 프로그램 보급



* 출처: 여성가족부(2012a).

【그림 II -11】 청소년보호 YP 프로그램의 개념도

YP프로그램은 미국의 청소년 매핑프로젝트(Youth Mapping Project, '97)와 청소년 에너지 패트롤(Energy Patrol, '84)에서 힌트를 얻어 학교 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모델링 실천 연구팀의 “Youth Patrol” 활동(2001)에서 유래하였으며, 활동 목적은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폭력, 음주, 흡연 등 유해환경은 물론 게임, 휴대폰, 만화, TV, 간행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매체환경 등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분별력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YP 활동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청소년보호 활동개념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가 전제된 청소년 중심의 자기보호와 사회의 규범적 보호를 강조하는 데 있다. 때문에, YP 프로그램만의 특징적인 전개방식은 청소년이 스스로 유해 환경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고 대응해 나가도록 과제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학부모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YP 프로그램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 참여(Youth Participating), 청소년 과제(Youth Projecting), 청소년 순찰(Youth Patrolling), 청소년 권리(Youth Powering)의 4가지로 설명된다.

정부는 ‘YP 활동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하여 부처간 협조를 통해 YP활동과제를 수행할 연구학교를 매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003년~), 지역사회의 YP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민간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학교를 구성하여 YP 프로그램의 보급을 지원(2006년~)하고 있다.

표 II-37 YP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현황

(단위: 개, 명)

지원대상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연구학교	32	43	48	44	43	39	40	44	44	377
활동학교	—	—	—	115	172	211	230	230	215	1,173
교사 직무연수	80	131	157	132	127	142	144	83	106	1,102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또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YP활동 지도를 위하여 YP교사용 지도서를 발간·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YP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YP 활동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YP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청소년들과 교사 및 학부모 등이 협동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유해한 매체, 시설, 장소, 물질, 행위 등을 정화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본 전제가 되는 유익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권리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동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정책의 한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청소년 보호 및 복지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접근 부족

소득양극화로 인한 중간층 감소 및 빈곤층 증가와 다문화가족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나 복지지원 대상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물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후기청소년(청년)에 대한 대응 부족

후기청소년(청년) 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한 가운데 어떤 부처도 후기청소년(청년) 대상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청년)이 정책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후기청소년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3) 유익환경 조성에 대한 관점 부재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 정책은 성인 대상 규제 중심으로 유해환경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의 청소년 보호 정책은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 생활환경 전반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제 3 장

19대 국회의원 대상 차기정부 정책방향 의견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3. 청소년정책 시급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4. 조사결과 시사점

제 3 장

19대 국회의원 대상 차기정부 정책방향 의견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입안·수행된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결정될 차기 행정부와는 달리, 차기 행정부와 협조 및 견제를 담당할 입법부인 제 19대 국회는 이미 구성이 된 상태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수행할 청소년 정책과제의 지향점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실제 정책 제언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제 19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과제의 일환으로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단, 본 조사의 내용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문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과 제안을 묻는 것으로, 조사 시점인 2012년 6월에는 국회 구성이 막 진행되던 시점으로 각 분야별 상임위원회의 구성위원들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정당별 청소년 정책 기조도 확립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조사의 결과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며 정당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12년 6월 11일~22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다. 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하여 각 국회의원별로 직접 조사자가 방문하여 의견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제 19대 국회의원 300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조사에 응한 모든 의원들을

* 이 장은 장근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이 원고의 초고는 “19개 국회에 청소년 정책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 본 조사의 상세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집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표집방식은 무응답자들을 체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조사결과에 편향을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응답자들이 자신의 성별이나 사회적 배경보다는 소속 정당과 소속 지역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정당별 응답율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응답자 특성에 의한 편향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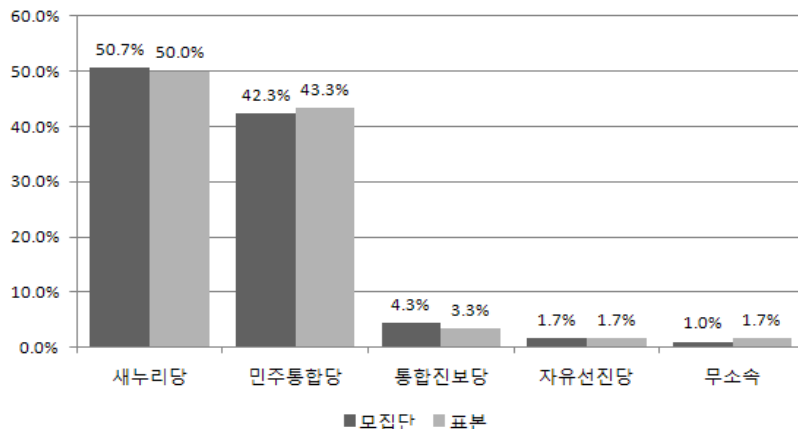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0%인 120명이 응답했다. 소속정당별로는 전체 무소속의원 3명 중 2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었으며, 민주통합당이 127명 소속의원 중 40.9%인 52명이 응답해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자유선진당은 5명 의원 중 2명(40.0%), 새누리당 소속의원의 응답율은 152명 중에서 39.5%인 60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소속의원 13명 중 4명이 응답해 30.8%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표본과 모집단에서의 정당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정당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조사 결과가 제 19대 국회에 참여한 정당의 의견을 비교적 고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었다.

표 Ⅲ-1 소속정당별 응답율

소 속	모 집 단	표 본	응 답 율
새누리당	152명	60명	39.5%
민주통합당	127명	52명	40.9%
통합진보당	13명	4명	30.8%
자유선진당	5명	2명	40.0%
무소속	3명	2명	66.7%
합계	300명	120명	40.0%

2) 조사내용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는 크게 청소년관련 환경 요인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시급성 평가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의견조사에 사용된 환경요인과 정책목표의 목록은 정책적 시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안을 기초로 산출하였다.



【그림 III-1】 정당별 제19대 국회구성비율과 본 조사응답율 비교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

첫 번째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소들 중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었다. 각각의 환경요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통계수치를 간략하게 부연하였다. 본 조사지에 포함된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 환경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환경요인 목록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연구에서 산출된 목록을 근거로 선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환경 요소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들 요소 중 중요도 순으로 3개만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 III-2 정책적 우선순위 평가대상 청소년 환경변화 목록

핵심문장	부연자료
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청소년(9-24세) 인구 구성비: '80년 36.8% → '12년 20.4% → '30년 13.7%
2. 이혼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 이혼가구: '90년 17만 가구 → '10년 127만 가구
3. 결혼이민, 외국인근로, 탈북 등 다문화 가족 증가	- 한국의 외국인 거주 증가율: '05년 53만 명 → '11년 126만 명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 '05년 6,121명 → '11년 36,676명 증가

핵심문장	부연자료
4.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	- 대기업 입직연령: '98년 남26세, 여23.5세 → '09년 남 28.7세, 여25.6세 - 초혼연령: '01년 남 29.5세 여 26.8세 → '11년 남 31.9세, 여 29.1세
5.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 우리 청소년의 '지적 역량'은 OECD 36개국 중 2위,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협력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5위
6.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및 청소년 폭력 심화	- 학교폭력 피해율: '09년 9.4% → '10년 11.8% → '11년 18.3%
7.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 상대빈곤률: '89년 8.6% → '99년 12.4% → '10년 14.9%
8.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률: '07년 68.2% → '10년 88.8%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 '11년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98점으로 '09년 64.3점, '10년 65.1점에 이어 3년 연속 OECD국가 중 최하위
10. 학교 중도탈락,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 '11년 고교생 3만8787명이 중도탈락, 초·중·고 전체로는 7만6489명이 중도탈락 - '99년 청소년 가출경험율 8.6%, '11년 13.1%로 증가
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06년 11.6% → '10년 14.3%, 청소년 우울감 경험율 ('05)29.9% → ('10) 37.4% '10년 청소년(15~24세)의 사망원인 1위 13% 고의적 자해(자살)
12.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 청소년들은 교육을 단순히 취업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 뚜렷, 노스페이스 등 물질주의적 가치 추구 확대

2) 청소년 정책목표별 시급성 평가

두 번째는 구체적인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시급성 평가로서 역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안)에서 주요 정책목표로 선정한 정책목표들을 중심으로 의견조사 목록을 작성하였다. 정책목표별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앞서와는 달리 각 정책목표별로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혀 시급하지 않음(1점)-보통(3점)-매우 시급함(5점) 까지 평가하였다. 의견조사 대상 정책목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정책목표 목록
1.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및 지원
2.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3. 청소년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4.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
5.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6.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기회 확대
7.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8.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및 자립 지원
9.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0.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1.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13. 범부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15. 청소년 지도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16. 청소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재정기반 확충
17. 청소년정책 과학적 추진기반 마련

2.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제 19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소들의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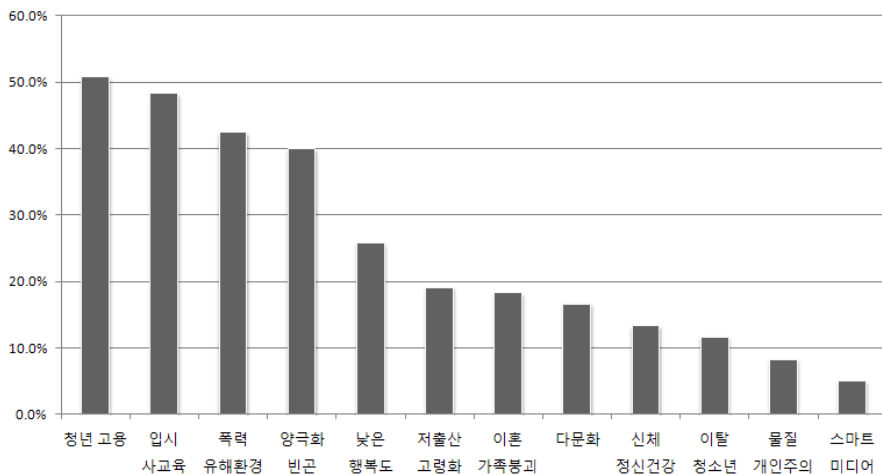
1) 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선정결과

제 19대 국회의원들에 의해 1순위에서 3순위 까지 선정된 청소년 환경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조사에 응답한 국회의원들은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요소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대상으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지연 문제’를 손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50.8%인 61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청소년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이 주제를

선택했다. 그 외에 의원들이 선정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입안 대상 청소년 환경요인은 ‘입시경쟁 및 사교육확대에 따른 불균형적 성장’(58명, 48.3%), ‘청소년 유해환경 및 폭력 심화’(51명, 42.5%),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증가’(48명, 40.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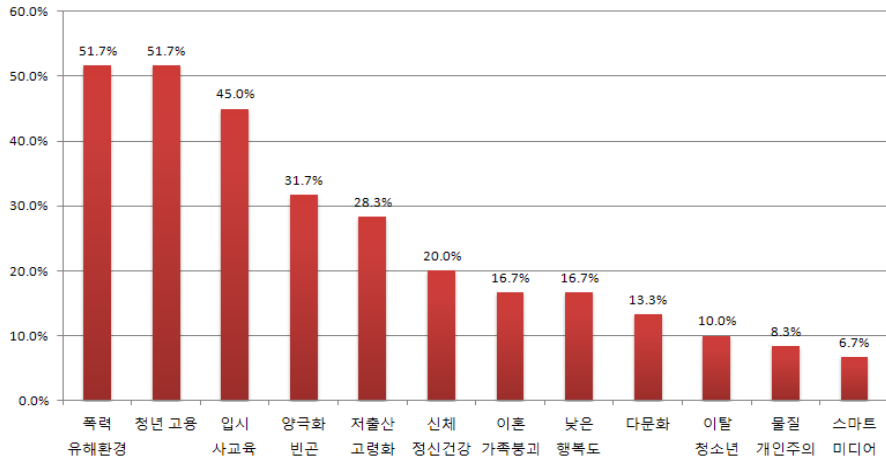
표 III-4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 환경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결과(1-3순위 전체)

구 분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전체
청년 고용 불안	51.7%	48.1%	75.0%	50.0%	50.0%	50.8%
입시경쟁과 사교육	45.0%	53.8%	50.0%	50.0%	0.0%	48.3%
청소년 폭력 및 유해환경	51.7%	34.6%	25.0%	50.0%	0.0%	42.5%
양극화와 빈곤가정 청소년	31.7%	46.2%	50.0%	50.0%	100.0%	40.0%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16.7%	32.7%	75.0%	0.0%	50.0%	25.8%
저출산과 고령화	28.3%	9.6%	0.0%	50.0%	0.0%	19.2%
이혼/가족붕괴, 가족돌봄 약화	16.7%	17.3%	0.0%	50.0%	100.0%	18.3%
다문화 청소년 증가	13.3%	23.1%	0.0%	0.0%	0.0%	16.7%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약화	20.0%	7.7%	0.0%	0.0%	0.0%	13.3%
다양한 이탈 청소년	10.0%	15.4%	0.0%	0.0%	0.0%	11.7%
물질주의 개인주의 증가	8.3%	7.7%	25.0%	0.0%	0.0%	8.3%
스마트 미디어 확산	6.7%	3.8%	0.0%	0.0%	0.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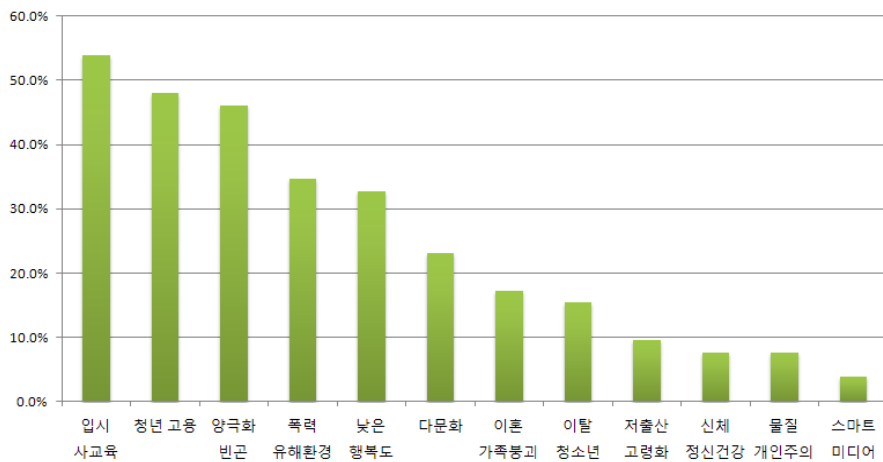


【그림 III-2】 청소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제19대 국회의원 전체)

2) 정당별 우선순위 차이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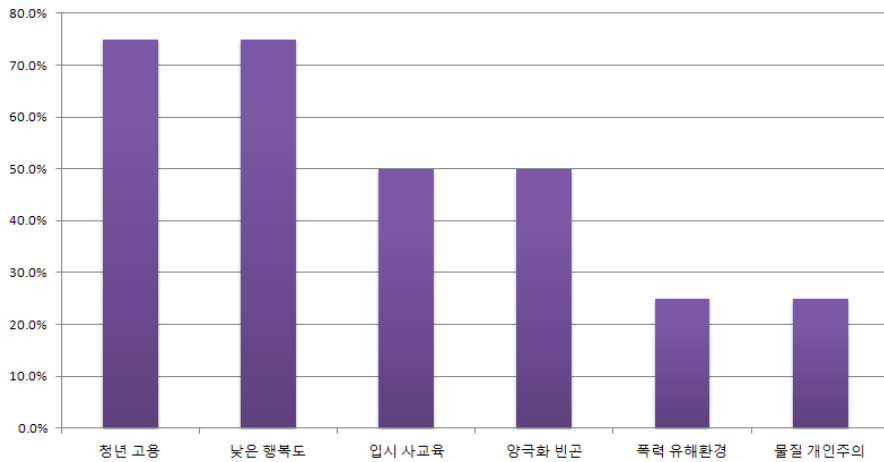
【그림 Ⅲ-3】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새누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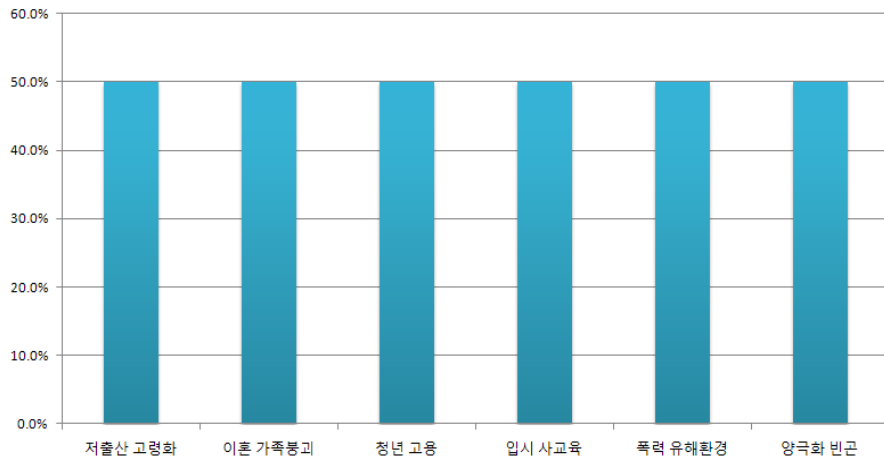
【그림 Ⅲ-4】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민주통합당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정당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청소년 환경요인의 정책적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정결과는 전체 응답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통합진보당은 청년고용문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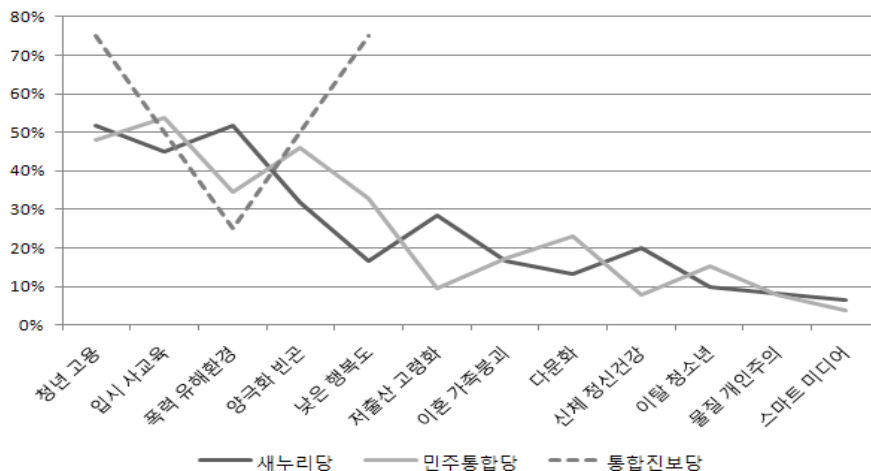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문제의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정했으며(75%),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 문제(25%)의 비율도 높았다. 전체 응답사례수가 4명으로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당간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응답자가 2명으로 선정비율을 비교하기에는 지나치게 사례수가 적어 유효한 추세를 분석하기는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전체 응답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림 Ⅲ-5】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통합진보당



【그림 Ⅲ-6】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자유선진당



【그림 Ⅲ-7】 소속정당별 우선순위 선정비율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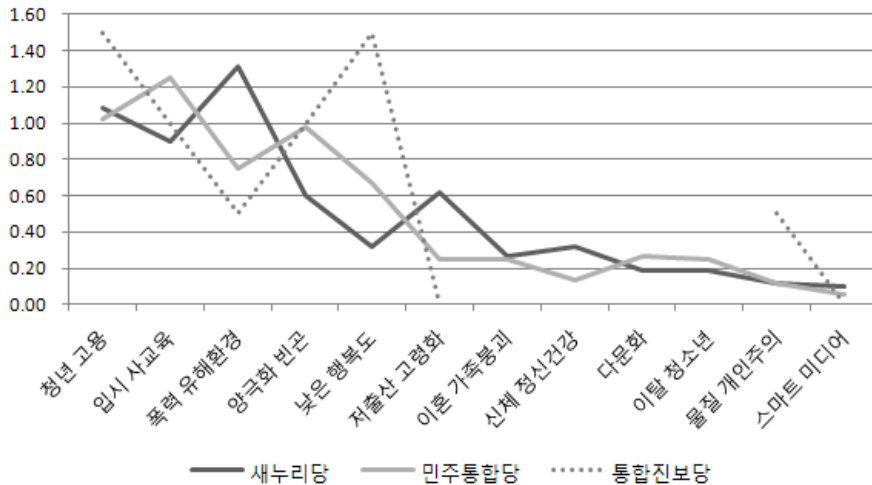
표 Ⅲ-5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 환경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 평가결과
(1,2,3순위 간 가중치반영)

구 분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전체
청년 고용 불안	1.08	1.02	1.50	1.50	1.50	1.08
입시경쟁과 사교육	0.90	1.25	1.00	1.00	0.00	1.04
청소년 폭력 및 유해환경	1.32	0.75	0.50	0.50	0.00	1.01
양극화와 빈곤가정 청소년	0.60	0.98	1.00	1.50	1.50	0.81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0.32	0.67	1.50	0.00	1.50	0.53
저출산과 고령화	0.62	0.25	0.00	1.00	0.00	0.43
이혼/가족붕괴, 가족돌봄 약화	0.27	0.25	0.00	0.50	1.50	0.28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약화	0.32	0.13	0.00	0.00	0.00	0.22
다문화 청소년 증가	0.18	0.27	0.00	0.00	0.00	0.21
다양한 이탈 청소년	0.18	0.25	0.00	0.00	0.00	0.20
물질주의 개인주의 증가	0.12	0.12	0.50	0.00	0.00	0.13
스마트 미디어 확산	0.10	0.06	0.00	0.00	0.00	0.08

청소년 환경 요소별의 중요성 평가에 있어 1위와 2위, 3위간의 우선순위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각 의원이 1순위로 선정한 환경요소에는 3점, 2순위 선정 요소에는 2점, 3순위

선정요소에는 1점씩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 각 청소년환경 요소별로 최대 평균 3점에서 최소 0점 사이의 가중치 분포가 가능하다. 분석 결과, 전체적인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으나 그 우선순위 내에서 정당간 가중치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청소년폭력과 유해환경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청소년환경으로 선정한 반면(평균 1.32점), 민주통합당 소속의원들은 입시경쟁과 사교육문제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평균 1.25점). 민주통합당 소속의원들이 양극화 및 빈곤문제(.98점)와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의 문제(.67점)를 더 중시한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62점) 문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청년고용 불안정 문제와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문제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각각 1.5점).



【그림 Ⅲ-8】 정당간 청소년 환경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 차이 (가중치 분석)

3. 청소년정책 시급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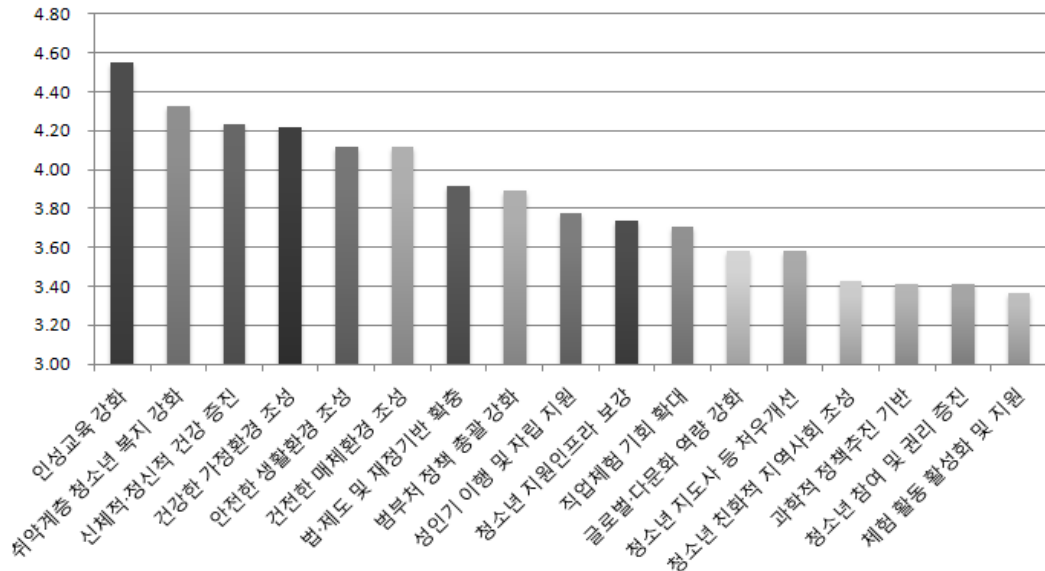
제19대 국회의원들이 평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별 시급성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이나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 정책,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정책,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인력 처우개선 등의 정책안은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III-6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정책목표별 시급성 평가결과 (전체 순위)

(단위: 점)

구 분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전체
인성교육 강화	4.67	4.50	4.00	4.50	3.50	4.55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	4.28	4.38	4.50	4.00	4.00	4.33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4.28	4.21	4.25	4.00	3.50	4.23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4.23	4.21	4.25	4.50	3.50	4.2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20	4.04	4.25	4.00	3.50	4.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4.13	4.15	3.75	4.50	3.00	4.12
법·제도 및 재정기반 확충	3.85	3.98	4.00	4.00	4.00	3.92
범부처 정책 총괄 강화	3.92	3.85	4.25	3.50	4.00	3.89
성인기 이행 및 자립 지원	3.68	3.83	4.75	3.50	3.50	3.78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3.75	3.75	3.75	3.00	3.50	3.73
직업체험 기회 확대	3.63	3.87	3.25	3.00	3.50	3.71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60	3.62	3.25	3.50	3.00	3.58
청소년 지도사 등 처우개선	3.35	3.81	4.25	3.50	3.50	3.58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30	3.52	4.00	3.50	3.50	3.43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3.37	3.44	3.75	3.50	3.00	3.4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3.20	3.63	3.75	3.50	3.00	3.41
체험 활동 활성화 및 지원	3.35	3.37	3.50	3.50	3.50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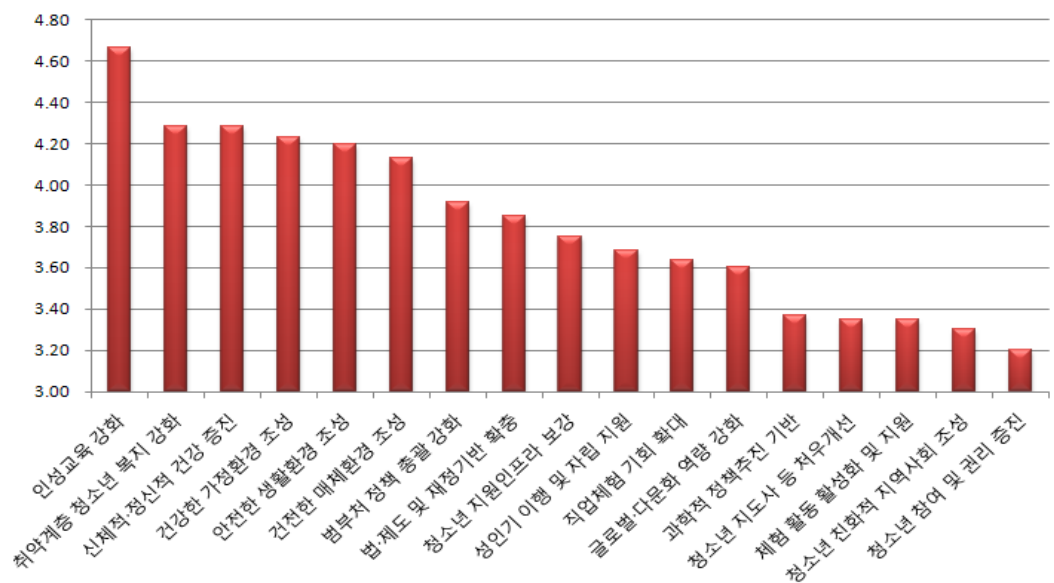
* 최하 1점, 최고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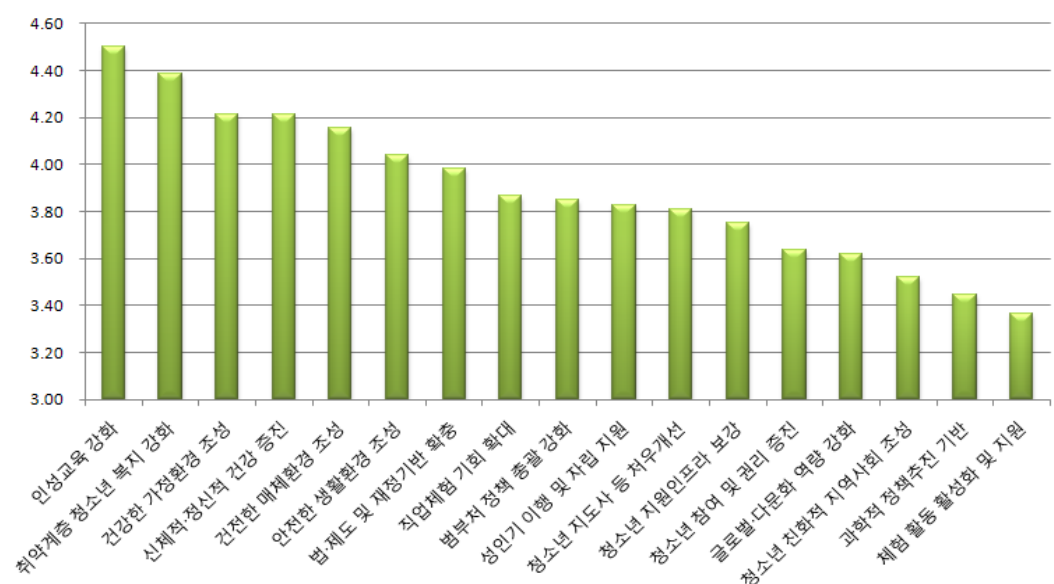
【그림 Ⅲ-9】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정책목표별 시급성 평가결과

정책안전별 시급성의 평가에 있어서도 소속정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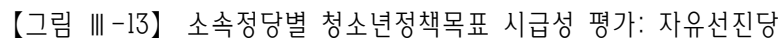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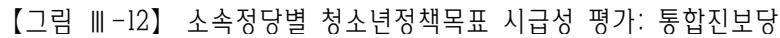
새누리당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에 가장 큰 방점을 둔 반면(4.67점), 청소년 지도사등의 처우개선 문제(3.35점)와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3.2점)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직업체험 기회 확대 정책의 시급성을 다른 당들에 비해 가장 높이 평가했으며(3.87점),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에 대한 시급성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3.63점). 통합진보당은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정책의 시급성을 나머지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했으며(4.75점), 청소년 지도사등 청소년 인력의 처우개선 정책(4.25점),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4점),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3.75점),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3.75점) 등에 있어서 나머지 당들에 비해 시급성을 높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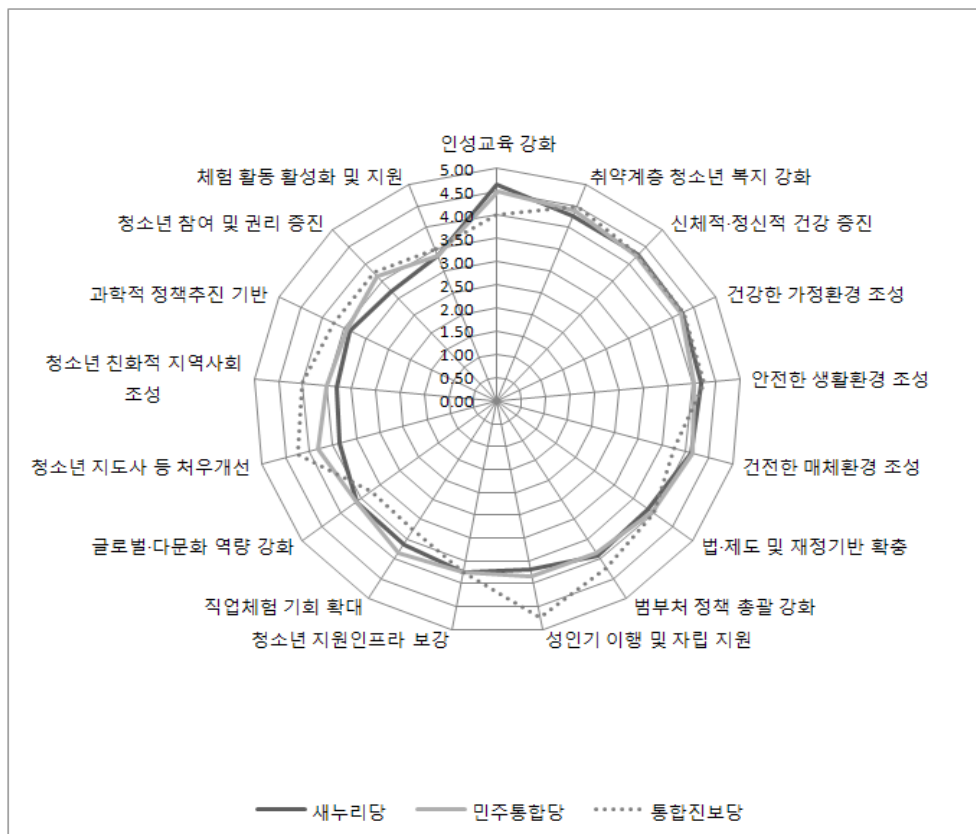


【그림 Ⅲ -10】 소속정당별 청소년정책목표 시급성 평가: 새누리당



【그림 Ⅲ -11】 소속정당별 청소년정책목표 시급성 평가: 민주통합당





【그림 Ⅲ -14】 정책안전별 시급성 평가점수의 정당간 비교 결과

3) 기타 정책의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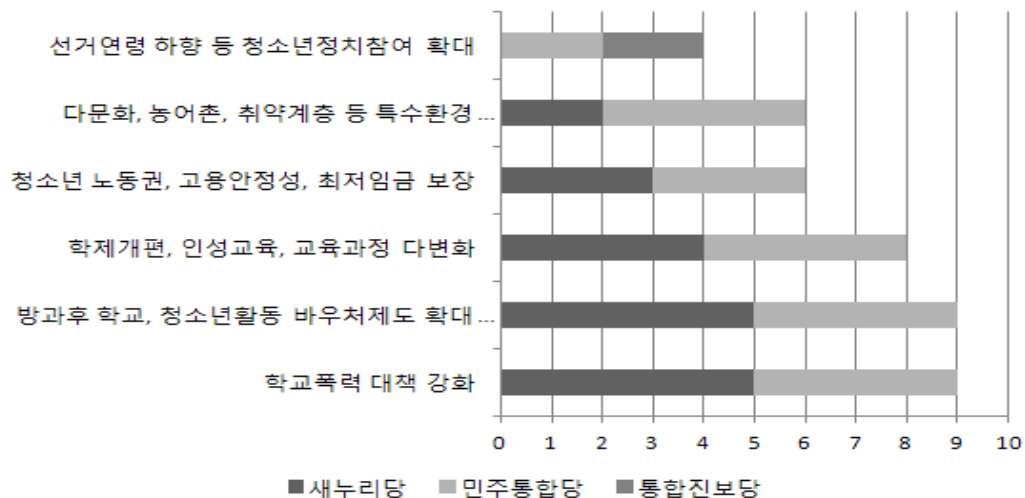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 제시하지 못한 청소년 정책 안전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안전에 대한 자유응답을 받았다. 조사에 참여한 12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모두 45명이 정책의견을 제시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21명, 민주통합당 의원 21명, 통합진보당 의원 2명, 무소속의원 1명이었다. 자유롭게 개진한 의견들을 주제별로 요약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제시된 정책안전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강화정책으로서 새누리당 의원 5명, 민주통합당 의원 4명이 이에 대한 정책안전을 제시했다. 또한 방과후 학교 및 청소년활동에 있어 바우처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정책을 제안한 의원이 역시 9명(새누리 5명, 민주통합 4명)이었다. 인성교육 중심의 학제개편이나 교육과정 및 기관을 다변화하는 등의

교육정책 개편에 관련된 정책제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각각 4명씩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고용안정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 제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각각 3명씩 제안하였다. 다문화배경 청소년이나 농어촌, 취약계층 청소년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 맞는 지원정책을 제안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4명, 새누리당 2명이었다. 반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안건을 제안한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없었던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각각 2명씩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인터넷 중독치료(새누리당 1명, 민주통합당 1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정책(새누리당 2명), 청소년들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은 2명의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안했다.

이들 정책의견 중에는 문항별 의견을 묻는 목록과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주제들이 기타 의견을 통해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체험활동 확대 정책이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안건은 기타 의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되었다.

표 III-7 기타 개별의원별 정책 제안 내용 요약

구 분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계
학교폭력 대책 강화	5	4	0	9
방과후 학교, 청소년활동 바우처제도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 체험 활동 확대	5	4	0	9
학제개편, 인성교육, 교육과정 다변화	4	4	0	8
청소년 노동권, 고용안정성, 최저임금 보장	3	3	0	6
다문화, 농어촌, 취약계층 등 특수환경 청소년 지원	2	4	0	6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정치참여 확대	0	2	2	4
인터넷 중독 치료	1	1	0	2
청소년 유해환경	2	0	0	2
청소년 생활문화공간 조성	0	2	0	2



【그림 Ⅲ -15】 기타 개별의원별 정책 제안: 소속정당별 비교

4. 조사결과 시사점

이상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제 19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여기는 5대 청소년 환경 요인을 순서대로 제시하자면 첫번째는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성인이 이행 지연 문제였고, 입시경쟁 심화 및 사교육 문제가 두 번째,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문제와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현상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빈곤가정 청소년의 증가 현상, 다섯 번째는 청소년의 낮은 행복과 삶의 질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중 40% 이상이 이들 5가지 환경 요인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향후 19대 국회에서 다룰 청소년 정책 안건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평가한 안건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교육과정 개편,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복지 및 지원 강화정책,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순이었다. 이들 안건의 시급성은 5점 만점에서 평균 4점 이상을 얻었다.

그러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청소년 환경 요인의 우선순위 평가와 정책안건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청소년폭력과 유해환경 문제를 중시한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의원들은 입시경쟁과 사교육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놓았다. 반면 통합진보당 소속의원들은 청년고용불안정 문제와 낮은 행복도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청소년 관련 정책안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 정책을 시급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청소년 지도사등의 처우개선 정책이나 청소년 참여권 증진 정책의 시급성은 낮게 평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청소년 직업체험 확대 정책과 청소년 참여권 증진 정책의 시급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통합진보당은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정책, 청소년 지도사 처우개선 정책,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의 시급성을 높이 평가했다.

청소년 환경 및 실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제19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청소년 생활환경 및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향후 각 정당의 청소년관련 문제제기와 법안 등의 추진에 있어 바람직한 합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정당에 따라서 온도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된 문제 현상들 중심으로 시급성이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이 생각한 가장 시급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청소년정책을 교육과 육성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특히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청소년 실태라 지적되었던 ‘후기청소년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정책’이나 ‘청소년 삶의 질 저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인 ‘청소년 생활환경의 개선 정책’의 시급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정책 추진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강화나 청소년 지도사등의 청소년관련 인력 처우개선 문제가 뒤로 밀려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의 입안이나 추진을 위해서는 본원을 비롯한 청소년정책연구기관과 정책실무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추진의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제 4 장

향후 청소년정책 방향과 주요과제

1. 청소년정책 추진 핵심키워드
2. 향후 청소년정책 주요 추진 과제

제 4 장

향후 청소년정책 방향과 주요과제*

1. 청소년정책 추진 핵심키워드

차기 정부의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핵심 키워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 첫 번째는 행복의 문제이다.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생활환경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의 성격을 반영하는 지표로 겸손과 조화를 강조하는 아시아 문화권이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서구문화권에 비해 행복도가 낮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수준은 이런 문화적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자기 절제를 강조하는 문화와 선행학습과 사교육으로 인해 스스로 성취하는 경험이 적은 교육환경, 여가 및 문화 참여와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사회 인프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의 행복수준과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일상생활 경험 중에 성취감, 몰입감, 자기 발전의 경험이 적음을 의미하며, 이런 경험의 부족은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이에 관련된 문화적·교육적·사회적 인프라의 양적향상과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역량(역량)의 문제이다. OECD에서 제안한 3대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기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적역량은 매우 우수하나 이를 자신과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율적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자율적 역량은 개개인의 능력과 권한이 강화되는 양방향 정보화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급속한 다문화화로 인해 공동체 내 이질성이 증가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체험활동’과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함께 청소년의 인성·창의성 발달에

* 이 장은 김기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이 원고의 초고는 “19개 국회에 청소년 정책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며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건강이라는 키워드이다.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미래 세대의 경쟁력 및 사회적 부담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춘기의 급속한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기는 필연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취약한 시기로서, 이를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가이드 함으로써 건강한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이 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1】 청소년정책 추진 핵심키워드

다음으로 개인 수준이 아닌 사회 수준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립이라는 키워드이다. 늦은 성인기의 시작은 단기적으로는 미래세대의 생산성 및 경제력 약화를 유발,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21세기 현재 대부분의 후기산업사회에서 청소년세대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학력화 추세 및 조기 퇴직 추세와 관련되면서 교육비용 대비 기대수입의 감소에 따른 미래 세대 전반의 빈곤화,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증대,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늦은 입직은 늦은 결혼으로, 늦은 결혼은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의 상승은 둘째 출산확률의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한다.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지원은 단지 청년기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안전이라는 키워드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업소나 유해매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에 대한 청소년들의 두려움은 어떤 연령층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학교나 가정 역시 폭력이나 학대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완전한 안전지대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물망 형태로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합이라는 키워드이다. 소득 양극화·중산층 감소·빈곤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계층차이의 증가, 국제결혼·취업이민자·탈북주민 증가 등에 따른 다문화화, 가치의 다양화에 따른 가치관 충돌 등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세대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평등·호혜·관용 중심의 가치관 형성 및 이질적 집단과의 교류 및 협력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 및 공동체에서 이질적 집단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반차별적 법과 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요청된다.

2. 향후 청소년정책 주요 추진 과제

1) 청소년정책 여건에 대한 SWOT

SWOT 분석은 내부 역량을 진단하고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 중에서 기회요인(Opportunities)과 위협 요인(Threats)을 추출하고, 청소년 실태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강점요인(Strength)과 약점 요인(Weakness)을 추출하여 SO전략(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ST전략(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WO전략(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WT전략(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김기현 외(2011)가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SWOT 분석을 토대로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강점(Strength) 요인은 높은 지적역량 수준과 학업성취도,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확대 및 사회 참여, 개성 및 다양성 추구, 근면·성실·인내 가치 존중 등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점(Weakness) 요인은 낮은 자기주도성과 능동적 참여 부족,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부족, 배려와 관용의 문화 부족,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약화, 물질주의적 가치 추구 등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회(Opportunity) 요인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대한 국제적 요구 증대, 유용하고 편리한 스마트 환경 확산, 청소년 참여 및 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 글로벌 기회 확대, 부모 및 청소년 여가 시간 확대 등이다. 반대로 위협(Threat) 요인은 과도한 입시경쟁 환경, 가정의 자녀양육 및 보호기능 약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빈곤 위험 확대, 청년 노동 시장의 위축 및 불안정 고용 확대, 결혼·출산 지연 및 기피현상 심화,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 등이다.

표 IV-1 청소년정책 핵심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표

강점(S)	약점(W)
[S1] 높은 지적역량 수준과 학업성취도 [S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확대 및 사회 참여 [S3] 개성 존중 및 감성 추구 [S4]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 추구	[W1] 낮은 자기주도성과 능동적 참여 부족 [W2]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사회적 역량) 부족 [W3] 배려와 관용의 문화 부족 [W4]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약화
기회(O)	위협(T)
[O1]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대한 국제적 요구 증대 [O2] 유용하고 편리한 스마트 환경 조성 및 첨단기술의 일상화 [O3] 청소년 참여 및 체험 기회 확대 [O4] 청소년 글로벌 기회 확대 [O5] 부모 및 청소년 여가 시간 확대	[T1] 과도한 입시경쟁 환경 [T2] 가정의 자녀양육 및 보호기능 약화 [T3]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빈곤 위험 확대 [T4] 청년 노동 시장의 위축 및 불안정 고용 확대 [T5]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

표 IV-2 SWOT 분석에 기초한 네 가지 청소년정책 핵심전략

[SO전략] 강점기반 기회활용	[WO전략] 약점보완 기회활용
◆ 지역사회 온라인 기반 청소년 참여 정책 추진 ◆ 청소년 투표 연령 조정 ◆ 감성적 교육환경 및 적시학습 강화 ◆ 다양한 학습인증 확대	◆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추진 ◆ 청소년 신체 및 정신 건강 강화
[ST전략] 강점기반 위협대처	[WT전략] 약점보완 위협회피
◆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강화 ◆ 청소년 유익 매체환경 조성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Youth Friendly Communities) 프로젝트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위기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먼저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SO 전략은 스마트 환경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대와 청소년들의 개성 및 감성, 다양성 추구 경향을 살려 학습공간을 감성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어느 곳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적시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학습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강점이 있고 잘 구축된 온라인 환경을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ST 전략은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 추구로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높은 지적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위협 요인들에 대처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유익한 매체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WO 전략은 높은 지적 역량 수준에 비해 낮은 사회적 역량과 자율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청소년들의 체험 및 참여 기회 확대를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WT 전략은 정책적 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과제로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물망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농산어촌, 시설아동, 장애청소년, 한부모 및 조손가정, 가출, 청소년 출원 청소년, 학업중단, 다문화 및 탈북 청소년 등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2) 향후 청소년 정책 주요 추진과제

(1) 강점기반 기회활용 전략(SO 전략)

이 영역은 높은 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감성적이며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강점을 살려 스마트 환경 구성에 따른 편리함과 첨단기술의 도입에 따른 편리함, 글로벌 기회 확대 등 기회요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익숙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펼칠 수 있는 사이버 제안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제안한 과제는 청소년정책 예산의 일정부분을 배분하여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핀란드 헬싱키의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이나 「필리핀 청소년의회(Sangguniang Kabataan)」 등 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차이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 투표연령을 대다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8세로 낮추거나 청소년들의 투표 결과를 일정정도 선거 결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시학습(Just-In-Time Learning)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한 학습 환경을 통해 어디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학습정보를 DB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안학교나 홈스쿨링(home schooling) 등 다양한 학습인증 확대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감성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의 경우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 구축과 더불어 녹지공간 등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이 학습과 문화,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강점기반 위협대처 전략(ST 전략)

이 영역은 청소년들의 높은 지적 역량과 스마트 환경 적응력,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 추구라는 강점은 살리고 다양한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첫 번째로 청소년들의 글로벌 및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역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남북간 청소년 교류 역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교, 수련시설 등에 보급·운영하며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후기 청소년(청년층)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은 주관부처가 분명치 않으며 청소년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12년 청년일자리 7만 1,000개 창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12년 대학생 1만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12년 총 1.5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가 대처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 2011; 국토해양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기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 고용할당제를 비롯하여 후기청소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아동복지 퇴소 청소년 등)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공간을 청소년들의 유익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고 청소년들의 매체활동능력 및 이해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와 관련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 지도사의 매체활동능력 및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해 미디어 교육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청소년 연령별, 대상별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확대하는 한편, 비관적 미디어 이용능력 제고를 위해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미디어 이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약점보완 기회활용(WO 전략)

이 영역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높은 지적 역량과 스마트 환경 적응력이라는 강점은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나 자율성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권리 증진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주5일제 도입,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시간과 체험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기회요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첫 번째로 청소년들을 위한 할인제도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바우처 제도,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생등과 학교밖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청소년증을 통합하여 유럽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청소년 카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영국의 기회카드(Opportunity Card)나 스코틀랜드의 영 스코트 카드(Young Scot Card)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 카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주변에 손쉽게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동아리나 클럽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청소년센터(communitry youth center)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에 시설 건립 방식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아파트단지의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전환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청소년센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동법 제11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청소년센터가 추진된다면 이를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추진 중인 역량기반 학습체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을 역량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목 수업이 청소년들의 역량을 증진하는 방식의 교과통합형 역량기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직업체험장(communitry workplace)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처럼 일본의 「커리어 스타트 위크(Career Start Week)」와 유사하게 5일 이내의 직업체험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나 영국의 갭 이어(gap year)와 같이 1년이나 1학기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1인 1스포츠 활성화와 토요일 스포츠클럽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체육시간 준수 및 내실화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약점보완 위협회피 전략(WT 전략)

이 영역은 청소년들의 약점 요인을 보완하고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환경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지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유니세프(UNICEF)에서 2000년부터 추진된 “청소년 친화 마을(CFC: Child and Youth Friendly Communities)”과 유네스코(UNESCO)에서 제안한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Growing Up in Cities)” 사업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및 지역사회 평가 지표 개발, 우수 지역사회 선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아동권리협약 권고에 대한 이행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권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입법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 비혼모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임신중절이나 강제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낙태에 대한 법률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정책 조정과 관련하여 2008년 이래 아동정책조정위원회(CPCC)가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각각 나뉘어져서 정책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등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관련된 전국 및 지방자치체 기구들 간에 아동 권리 관련 업무와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와 관련된 재정 자원의 할당이 가용 자원에 비례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 중이므로 경제발전의 진전 상태와 OECD 수준에 보다 근접하도록 협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수준을 재평가하고 늘릴 것을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통계 및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 수행에 있어서 방법론적 일관성의 결여와 협약이 포괄하는 영역별 자료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약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산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의 수립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안팎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할 것,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아동 폭력에 대하여 명확한 국내법적 금지를 도입할 것,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교육과정 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그 귀결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야간노동 금지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시행과 최저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수립된 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할 것, 노동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감독을 증진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사회를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종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청소년폭력에 대한 예방과 저소득층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장애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 (2011).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 경기: 고용노동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추진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토해양부 (2011). 2012년 국토해양부 업무추진계획. 경기: 국토해양부.
- 김기현, 임희진, 장근영, 김혜영, 황옥경 (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장근영 (201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 패널조사계획 및 예비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c). 국정운영백서-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기반 조성(여성가족부). 서울: 여성가족부(미발간 내부자료).
- UNICEF (2005). Cities With Children-Child Friendly Cities in Italy,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부 록

제19대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표

부 록

부록-1 차기정부(2013-2017년) 청소년정책 방향과 목표(1순위)

구 분	전 체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13 (10.83)	9 (15.00)	4 (7.69)	0 (0.00)	0 (0.00)	0 (0.00)
2. 이혼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1 (0.83)	1 (1.67)	0 (0.00)	0 (0.00)	0 (0.00)	0 (0.00)
3. 결혼이민, 외국인근로, 탈북 등 다문화 가족 증가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	27 (22.50)	12 (20.00)	12 (23.08)	1 (25.00)	1 (50.00)	1 (50.00)
5.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24 (20.00)	9 (15.00)	14 (26.92)	1 (25.00)	0 (0.00)	0 (0.00)
6.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및 청소년 폭력 심화	27 (22.50)	20 (33.33)	7 (13.46)	0 (0.00)	0 (0.00)	0 (0.00)
7.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13 (10.83)	3 (5.00)	8 (15.38)	1 (25.00)	1 (50.00)	0 (0.00)
8.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11 (9.17)	4 (6.67)	5 (9.62)	1 (25.00)	0 (0.00)	1 (50.00)
10. 학교 중도탈락,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2 (1.67)	1 (1.67)	1 (1.92)	0 (0.00)	0 (0.00)	0 (0.00)
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약화	2 (1.67)	1 (1.67)	1 (1.92)	0 (0.00)	0 (0.00)	0 (0.00)
12.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전 체	120 (100)	60 (100)	52 (100)	4 (100)	2 (100)	2 (100)

부록-2

차기정부(2013-2017년) 청소년정책 방향과 목표(2순위)

구 분	전 체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3 (2.50)	2 (3.33)	0 (0.00)	0 (0.00)	1 (50.00)	0 (0.00)
2. 이혼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9 (7.50)	4 (6.67)	4 (7.69)	0 (0.00)	0 (0.00)	1 (50.00)
3. 결혼이민, 외국인근로, 탈북 등 다문화 가족 증가	5 (4.17)	3 (5.00)	2 (3.85)	0 (0.00)	0 (0.00)	0 (0.00)
4.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	15 (12.50)	10 (16.67)	4 (7.69)	1 (25.00)	0 (0.00)	0 (0.00)
5.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19 (15.83)	9 (15.00)	9 (17.31)	0 (0.00)	1 (50.00)	0 (0.00)
6.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및 청소년 폭력 심화	16 (13.33)	8 (13.33)	7 (13.46)	1 (25.00)	0 (0.00)	0 (0.00)
7.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23 (19.17)	11 (18.33)	11 (21.15)	0 (0.00)	0 (0.00)	1 (50.00)
8.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3 (2.50)	2 (3.33)	1 (1.92)	0 (0.00)	0 (0.00)	0 (0.00)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10 (8.33)	1 (1.67)	8 (15.38)	1 (25.00)	0 (0.00)	0 (0.00)
10. 학교 중도탈락,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6 (5.00)	3 (5.00)	3 (5.77)	0 (0.00)	0 (0.00)	0 (0.00)
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6 (5.00)	5 (8.33)	1 (1.92)	0 (0.00)	0 (0.00)	0 (0.00)
12.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5 (4.17)	2 (3.33)	2 (3.85)	1 (25.00)	0 (0.00)	0 (0.00)
전 체	120 (100)	60 (100)	52 (100)	4 (100)	2 (100)	2 (100)

부록-3

차기정부(2013-2017년) 청소년정책 방향과 목표(3순위)

구 분	전 체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7 (5.83)	6 (10.00)	1 (1.92)	0 (0.00)	0 (0.00)	0 (0.00)
2. 이혼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12 (10.00)	5 (8.33)	5 (9.62)	0 (0.00)	1 (50.00)	1 (50.00)
3. 결혼이민, 외국인근로, 탈북 등 다문화 가족 증가	15 (12.50)	5 (8.33)	10 (19.23)	0 (0.00)	0 (0.00)	0 (0.00)
4.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	19 (15.83)	9 (15.00)	9 (17.31)	1 (25.00)	0 (0.00)	0 (0.00)
5.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15 (12.50)	9 (15.00)	5 (9.62)	1 (25.00)	0 (0.00)	0 (0.00)
6.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 및 청소년 폭력 심화	8 (6.67)	3 (5.00)	4 (7.69)	0 (0.00)	1 (50.00)	0 (0.00)
7.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12 (10.00)	5 (8.33)	5 (9.62)	1 (25.00)	0 (0.00)	1 (50.00)
8.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3 (2.50)	2 (3.33)	1 (1.92)	0 (0.00)	0 (0.00)	0 (0.00)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10 (8.33)	5 (8.33)	4 (7.69)	1 (25.00)	0 (0.00)	0 (0.00)
10. 학교 중도탈락, 가출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6 (5.00)	2 (3.33)	4 (7.69)	0 (0.00)	0 (0.00)	0 (0.00)
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약화	8 (6.67)	6 (10.00)	2 (3.85)	0 (0.00)	0 (0.00)	0 (0.00)
12.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5 (4.17)	3 (5.00)	2 (3.85)	0 (0.00)	0 (0.00)	0 (0.00)
전 체	120 (100)	60 (100)	52 (100)	4 (100)	2 (100)	2 (100)

부록-4 차기정부(2013-2017년) 핵심 청소년 정책

구 분	전 체	새누리 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자유 선진당	무소속
1.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	4.55	4.67	4.50	4.00	4.50	3.50
2.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4.33	4.28	4.38	4.50	4.00	4.00
3.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4.23	4.28	4.21	4.25	4.00	3.50
4.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4.22	4.23	4.21	4.25	4.50	3.50
5.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4.12	4.13	4.15	3.75	4.50	3.00
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2	4.20	4.04	4.25	4.00	3.50
7. 청소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재정기반 확충	3.92	3.85	3.98	4.00	4.00	4.00
8. 범부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3.89	3.92	3.85	4.25	3.50	4.00
9.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및 자립 지원	3.78	3.68	3.83	4.75	3.50	3.50
10.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3.73	3.75	3.75	3.75	3.00	3.50
11.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기회 확대	3.71	3.63	3.87	3.25	3.00	3.50
12. 청소년 지도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3.58	3.35	3.81	4.25	3.50	3.50
13. 청소년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58	3.60	3.62	3.25	3.50	3.00
14.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43	3.30	3.52	4.00	3.50	3.50
15.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3.41	3.20	3.63	3.75	3.50	3.00
16. 청소년정책 과학적 추진기반 마련	3.41	3.37	3.44	3.75	3.50	3.00
17.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및 지원	3.37	3.35	3.37	3.50	3.50	3.50

부록-5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	1	18	41	60
	(0.00)	(0.00)	(1.67)	(30.00)	(68.33)	(100)
민주통합당	0	0	8	10	34	52
	(0.00)	(0.00)	(15.38)	(19.23)	(65.38)	(100)
통합진보당	0	0	2	0	2	4
	(0.00)	(0.00)	(50.00)	(0.00)	(50.00)	(100)
자유선진당	0	0	0	1	1	2
	(0.00)	(0.00)	(0.00)	(50.00)	(5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0	0	12	30	78	120
	(0.00)	(0.00)	(10.00)	(25.00)	(65.00)	(100)

부록-6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	7	29	24	60
	(0.00)	(0.00)	(11.67)	(48.33)	(40.00)	(100)
민주통합당	0	0	6	20	26	52
	(0.00)	(0.00)	(11.54)	(38.46)	(50.00)	(100)
통합진보당	0	0	0	2	2	4
	(0.00)	(0.00)	(0.00)	(50.00)	(50.00)	(100)
자유선진당	0	0	0	2	0	2
	(0.00)	(0.00)	(0.00)	(100)	(0.00)	(100)
무소속	0	0	1	0	1	2
	(0.00)	(0.00)	(50.00)	(0.00)	(50.00)	(100)
전 체	0	0	14	53	53	120
	(0.00)	(0.00)	(11.67)	(44.17)	(44.17)	(100)

부록-7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	7	29	24	60
	(0.00)	(0.00)	(11.67)	(48.33)	(40.00)	(100)
민주통합당	0	0	11	19	22	52
	(0.00)	(0.00)	(21.15)	(36.54)	(42.31)	(100)
통합진보당	0	0	1	1	2	4
	(0.00)	(0.00)	(25.00)	(25.00)	(50.00)	(100)
자유선진당	0	0	1	0	1	2
	(0.00)	(0.00)	(50.00)	(0.00)	(5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0	0	21	50	49	120
	(0.00)	(0.00)	(17.50)	(41.67)	(40.83)	(100)

부록-8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	10	26	24	60
	(0.00)	(0.00)	(16.67)	(43.33)	(40.00)	(100)
민주통합당	0	0	10	21	21	52
	(0.00)	(0.00)	(19.23)	(40.38)	(40.38)	(100)
통합진보당	0	0	1	1	2	4
	(0.00)	(0.00)	(25.00)	(25.00)	(50.00)	(100)
자유선진당	0	0	0	1	1	2
	(0.00)	(0.00)	(0.00)	(50.00)	(5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0	0	22	50	48	120
	(0.00)	(0.00)	(18.33)	(41.67)	(40.00)	(100)

부록-9 건전한 매체 환경 조성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2	8	30	20	60
	(0.00)	(3.33)	(13.33)	(50.00)	(33.33)	(100)
민주통합당	0	2	10	18	22	52
	(0.00)	(3.85)	(19.23)	(34.62)	(42.31)	(100)
통합진보당	0	0	2	1	1	4
	(0.00)	(0.00)	(50.00)	(25.00)	(25.00)	(100)
자유선진당	0	0	0	1	1	2
	(0.00)	(0.00)	(0.00)	(50.00)	(50.00)	(100)
무소속	0	1	0	1	0	2
	(0.00)	(50.00)	(0.00)	(50.00)	(0.00)	(100)
전 체	0	5	20	51	44	120
	(0.00)	(4.17)	(16.67)	(42.50)	(36.67)	(100)

부록-10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	10	28	22	60
	(0.00)	(0.00)	(16.67)	(46.67)	(36.67)	(100)
민주통합당	0	0	12	26	14	52
	(0.00)	(0.00)	(23.08)	(50.00)	(26.92)	(100)
통합진보당	0	0	0	3	1	4
	(0.00)	(0.00)	(0.00)	(75.00)	(25.00)	(100)
자유선진당	0	0	1	0	1	2
	(0.00)	(0.00)	(50.00)	(0.00)	(5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0	0	24	58	38	120
	(0.00)	(0.00)	(20.00)	(48.33)	(31.67)	(100)

부록-11 청소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재정기반 확충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0	18	33	9	60
	(0.00)	(0.00)	(30.00)	(55.00)	(15.00)	(100)
민주통합당	0	0	13	27	12	52
	(0.00)	(0.00)	(25.00)	(51.92)	(23.08)	(100)
통합진보당	0	0	1	2	1	4
	(0.00)	(0.00)	(25.00)	(50.00)	(25.00)	(100)
자유선진당	0	0	0	2	0	2
	(0.00)	(0.00)	(0.00)	(100)	(0.00)	(100)
무소속	0	0	0	2	0	2
	(0.00)	(0.00)	(0.00)	(100)	(0.00)	(100)
전 체	0	0	32	66	22	120
	(0.00)	(0.00)	(26.67)	(55.00)	(18.33)	(100)

부록-12 범부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3	17	22	18	60
	(0.00)	(5.00)	(28.33)	(36.67)	(30.00)	(100)
민주통합당	0	4	12	24	12	52
	(0.00)	(7.69)	(23.08)	(46.15)	(23.08)	(100)
통합진보당	0	0	0	3	1	4
	(0.00)	(0.00)	(0.00)	(75.00)	(25.00)	(100)
자유선진당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무소속	0	0	0	2	0	2
	(0.00)	(0.00)	(0.00)	(100)	(0.00)	(100)
전 체	0	7	30	52	31	120
	(0.00)	(5.83)	(25.00)	(43.33)	(25.83)	(100)

부록-13 청소년 성인기 이행 지원 및 자립 지원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3	21	28	8	60
	(0.00)	(5.00)	(35.00)	(46.67)	(13.33)	(100)
민주통합당	0	0	20	21	11	52
	(0.00)	(0.00)	(38.46)	(40.38)	(21.15)	(100)
통합진보당	0	0	0	1	3	4
	(0.00)	(0.00)	(0.00)	(25.00)	(75.00)	(100)
자유선진당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0	3	43	52	22	120
	(0.00)	(2.50)	(35.83)	(43.33)	(18.33)	(100)

부록-14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2	18	33	7	60
	(0.00)	(3.33)	(30.00)	(55.00)	(11.67)	(100)
민주통합당	0	1	20	22	9	52
	(0.00)	(1.92)	(38.46)	(42.31)	(17.31)	(100)
통합진보당	0	0	2	1	1	4
	(0.00)	(0.00)	(50.00)	(25.00)	(25.00)	(100)
자유선진당	0	0	2	0	0	2
	(0.00)	(0.00)	(100)	(0.00)	(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0	3	43	57	17	120
	(0.00)	(2.50)	(35.83)	(47.50)	(14.17)	(100)

부록-15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기회 확대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1	3	20	29	7	60
	(1.67)	(5.00)	(33.33)	(48.33)	(11.67)	(100)
민주통합당	0	2	13	27	10	52
	(0.00)	(3.85)	(25.00)	(51.92)	(19.23)	(100)
통합진보당	0	0	3	1	0	4
	(0.00)	(0.00)	(75.00)	(25.00)	(0.00)	(100)
자유선진당	0	0	2	0	0	2
	(0.00)	(0.00)	(100)	(0.00)	(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1	5	39	58	17	120
	(0.83)	(4.17)	(32.50)	(48.33)	(14.17)	(100)

부록-16 청소년 지도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5	30	24	1	60
	(0.00)	(8.33)	(50.00)	(40.00)	(1.67)	(100)
민주통합당	0	2	14	28	8	52
	(0.00)	(3.85)	(26.92)	(53.85)	(15.38)	(100)
통합진보당	0	0	0	3	1	4
	(0.00)	(0.00)	(0.00)	(75.00)	(25.00)	(100)
자유선진당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0	7	46	57	10	120
	(0.00)	(5.83)	(38.33)	(47.50)	(8.33)	(100)

부록-17 청소년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3	24	27	6	60
	(0.00)	(5.00)	(40.00)	(45.00)	(10.00)	(100)
민주통합당	0	3	20	23	6	52
	(0.00)	(5.77)	(38.46)	(44.23)	(11.54)	(100)
통합진보당	0	0	3	1	0	4
	(0.00)	(0.00)	(75.00)	(25.00)	(0.00)	(100)
자유선진당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무소속	0	0	2	0	0	2
	(0.00)	(0.00)	(100)	(0.00)	(0.00)	(100)
전 체	0	6	50	52	12	120
	(0.00)	(5.00)	(41.67)	(43.33)	(10.00)	(100)

부록-18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1	5	31	21	2	60
	(1.67)	(8.33)	(51.67)	(35.00)	(3.33)	(100)
민주통합당	0	2	26	19	5	52
	(0.00)	(3.85)	(50.00)	(36.54)	(9.62)	(100)
통합진보당	0	0	1	2	1	4
	(0.00)	(0.00)	(25.00)	(50.00)	(25.00)	(100)
자유선진당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1	7	60	44	8	120
	(0.83)	(5.83)	(50.00)	(36.67)	(6.67)	(100)

부록-19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1	4	38	16	1	60
	(1.67)	(6.67)	(63.33)	(26.67)	(1.67)	(100)
민주통합당	0	1	23	22	6	52
	(0.00)	(1.92)	(44.23)	(42.31)	(11.54)	(100)
통합진보당	0	1	0	2	1	4
	(0.00)	(25.00)	(0.00)	(50.00)	(25.00)	(100)
자유선진당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무소속	0	0	2	0	0	2
	(0.00)	(0.00)	(100)	(0.00)	(0.00)	(100)
전 체	1	6	64	41	8	120
	(0.83)	(5.00)	(53.33)	(34.17)	(6.67)	(100)

부록-20 청소년정책 과학적 추진기반 마련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0	3	33	23	1	60
	(0.00)	(5.00)	(55.00)	(38.33)	(1.67)	(100)
민주통합당	0	4	25	19	4	52
	(0.00)	(7.69)	(48.08)	(36.54)	(7.69)	(100)
통합진보당	0	0	1	3	0	4
	(0.00)	(0.00)	(25.00)	(75.00)	(0.00)	(100)
자유선진당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무소속	0	0	2	0	0	2
	(0.00)	(0.00)	(100)	(0.00)	(0.00)	(100)
전 체	0	7	62	46	5	120
	(0.00)	(5.83)	(51.67)	(38.33)	(4.17)	(100)

부록-21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및 지원

구 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 체
새누리당	2	4	29	21	4	60
	(3.33)	(6.67)	(48.33)	(35.00)	(6.67)	(100)
민주통합당	0	0	36	13	3	52
	(0.00)	(0.00)	(69.23)	(25.00)	(5.77)	(100)
통합진보당	0	0	2	2	0	4
	(0.00)	(0.00)	(50.00)	(50.00)	(0.00)	(100)
자유선진당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무소속	0	0	1	1	0	2
	(0.00)	(0.00)	(50.00)	(50.00)	(0.00)	(100)
전 체	2	4	69	38	7	120
	(1.67)	(3.33)	(57.50)	(31.67)	(5.83)	(100)

부록-22 기타

정당	정책	시급성
새누리당	•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마련	매우 시급함
	• 학교 폭력 근절 방안 마련	
민주통합당	• 입시제도 개선	매우 시급함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 창의적 상상력 확대 시스템 개선	약간 시급함
	• 청소년 건전한 문화조성 환경 마련	
	• 학교교육 이외 대체교육 선택권 마련	

구 분	내 용
새누리당	〈학교폭력〉 현재 대중매체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은 부족한 실정임. 그러하기 때문에 영국의 'ABC정책'(Anti Bullying Campaign)이나 노르웨이의 'Zero Program', 핀란드 'Kiva Koulu' 같은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지역사회·가정이 하나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예방 및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함.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학교폭력의 중요 구성 요소인 학교·지역사회·가정이 하나의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함.
	구체적 제안 수준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이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 증원을 제안하고자 함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심각성과 관련해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00방, 00룸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인·허가에 있어 1회 위반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급선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어 비만이나 우울이 늘고 있음-이에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청소년 돌봄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한 법개정에 주력해보고자 함.
	방과후학교 등에 대한 지원확대와 각종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만성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보안관 확충, 학교와 경찰력의 연계강화를 통해서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차상위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격 성장
	〈청년실업, 고용불안정 해소〉 청소년 문제는 여러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결혼, 출산 등 연이어 지연되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성인기 이행 자체가 지연되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해소가 가장 시급한 청소년 문제로 판단되고 있음. 청소년 연령규정의 재정비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대책 마련(국가<->청년 매칭 사업, 기업<->청년 네트워킹 사업)에 필요한 법령 정비를 하고자 함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기업 및 공기업의 취업 설명회 강화, 현재 일부 상위권 대학에 몰리고 있는 경향, 취업기준을 학벌이 아닌 지원자의 능력으로 판단하도록 촉구, 신입사원 선발에 적극적 형태를 보이도록 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에 외면하는 취업현실에 맞추어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계속적인 인력풀 구성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기업의 융합을 추진

구 분	내 용
	학교 중도 탈락, 소년원 출신 등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자활, 자립 프로그램 개발 및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필요. 지역(시, 군, 구)단위 학교 및 지역 상담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하고자 함
	청소년들의 인성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취약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지원 확대, 지역 커뮤니티 구축(청소년 참여 가능 프로그램 확대) 등
	아동, 청소년의 정신보건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개정 필요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해나가야 함. 청소년 상담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 치료 인력을 확보하고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등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중독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하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가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가출청소년쉼터,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육체적 혹은 언어적인 폭력에 의해 자신의 꿈을 피워보기도 전에 세상과 단절되고 있는 모습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과 캠페인에 노력할 것입니다.
	1.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단체 인증제를 연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지식전달 중심 학교교육의 단점보완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체험학습에 중점을 둔 청소년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토록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통해 경쟁적인 입시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신뢰성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인증제 법률을 확립해야 함을 제안) 2. "가정 양육문제, 휴대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스트레스 증대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학교폭력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폭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학교내 다양한 청소년 단체 활동의 긍정적인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서 모든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토록 개방하고 1학생 1청소년단체 활동 시행을 의무화 하도록 제안하고자 함."("학교내 다양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학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모든 학생이 1개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
	1. 과도한 입시제도와 학력위주의 사회 분위기 타파. 2. 물질만능 개인주의적 가치관 지양. 3.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구 분	내 용
민주통합당	1. "학제 개편으로 현행 3월 입학 및 2월 졸업을 조정하여, 9월 입학 8월 졸업으로 전세계적 조류에 맞게 시기, 조절 필요!, 유학 및 학생 교류에 있어 우리식 학제 및 학기제 조절 필수!" 2. "강력한 교육개혁으로 사교육을 폐지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철폐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인성 함양을 통해 전인교육 완성 필요!"
	1. 청소년 파트타임(단기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에서 인권, 노동권보호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 법적 보완이 필요. 2.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1.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과과정 개발 및 대입 입시 연계, 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부모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 이와 함께 대학입시에서도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고교 졸업후부터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법제도적 지원 정책의 수립
민주통합당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볼때 효과적인 지원체계와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청소년 자살예방 전달체계 구축 등의 정책제안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1.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야 함. 2.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자기에게 있는 다양한 능력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줄수 있는 기회가 필요. 예) 재능기부 등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시 특기 활동 등으로 extra 포인트를 허용해 청소년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함. 꼭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춤, 노래, 컴퓨터)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1.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증가하는 청소년범죄율,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적, 심신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 육성이 필요함. 2.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전체의 1%가량에 불과하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현재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건장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책적으로 수립하고자 함.
	대한민국에 청소년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꿈에 대한 창의력, 직업에 대한 상상력이 줄어든 것 같다. 7~80년대처럼 자연속에서 뛰어놀수 있는 환경이 다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자연이 주는 초연지기와 꿈의 크기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 대체도 불가하다. '놀토'를 아이들에 자연의 초연지기, 꿈, 상상력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교육과정에 '놀토'를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구 분	내 용
	청소년들을 믿을 그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유흥업소는 연령 제한 때문에, 일반 놀이 시설 등은 유아들이 가는 곳으로 분류됨으로써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음. 동네 놀이터, 골목길, 빈집, 주차장 등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열린 공간 조성이 필요, 단, 계몽적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은 제발 지양
	청소년 할인, 문화 교육 혜택 및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지역사회와 연관된 기여 활동시 포인트를 주는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의 좋은 사례를 발굴해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문화 교육 역시 시급함.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함. 청소년기에 인생 계단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지난 2003년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1사1촌운동'은 기업 하나가 마을 하나와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위 운동을 본따 '1교(校) 1교(敎) 운동'을 제안해 보고자 함. 즉 1개의 학교와 인근 1개의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이 하나로 묶여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
	청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자금 성격의 기금조성(단순지원이 아닌 청년빈곤층 최소화) 1) 대기업 펀드 및 국가, 지자체 예산->재원조달 검토, 2) 조건부 지원->구직, 창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사회봉사활동 등 기준안 마련
	핵심외제: 청소년을 관리의 주체가 아닌 참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학교교육 이외 대응하는 교육장 마련
	청소년들의 교육과정 다변화를 통한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교육강화 - 직업, 학교, 이념 등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적, 질적 강화
	1.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만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 및 참여를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 추진. 2.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 제개정.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 공제회 부담 등을 통한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
	사회 양극화에 따른 청소년 빈곤문제로 인해 청소년 폭력, 학교 중도탈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피부양자조건을 완화하고 개별급여 실시 및 차상위 지원방안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 분	내 용
	1. 20세~24세 무렵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장기 계획을 수립(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 연령 규정을 30세로 늦추는 것에는 반대) 2.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사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 직업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예, 운전면허 취득) 3. 선거 연령 하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최소 양식 함양 필요
	1. 무상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의 전국적 확대, 대학 등록금 정상화(반값등록금)를 통한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및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 취업의 안정성 모색을 위한 제반 규정을 개정함. 2. 청소년 모두가 각자 개성 있게 각 분야에서 꿈을 실현토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고, 각 분야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주5일수업제 내실을 기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가출청소년 쉼터 조성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지원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육성 기금 안정화 정책 시행.
	*학교폭력 대책 관련 법안 추진, 관련 예산 확충, 1)학교폭력, 신체에 위해 가하는 범죄적 성격 국한, 정신적 고통 유발할 수 있는 광의적 행위로 확대, 2)교육감과 학교장에 대한 책무 강화(예방활동, 연수의무 실시 등), 3)자발적인 폭력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또래 조정 상담제' 등 실시, 참여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등, 4)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5)학교폭력 은폐, 축소 교원 징계 강화, 6)학교폭력 상담전문인력 확충 및 재원 마련
통합진보당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조정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무소속	〈제안의제〉 1.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및 법규 제정 필요. 2. 다문화 가정 및 결혼 청소년 가정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 정부 지원 확대 필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check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youth policy conducted by the last government,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youth in Korea in 2012, and to suggest the youth policy agenda to be pursued in the next government.

To do this, we have analyzed a variety of youth policy related material produced during last 5 years, and conducted a survey to the 19th congress members on youth policy issues, held focused seminars to discuss the results.

The performance of the last government youth policy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expand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also Youth Academy expansion policy, and the Online-game using regulation law was selected as the main achievement. But the lack of benefit the environment policy rather than regulation of hazardou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hort term and one-time school-based youth activities policy, not improving harsh treatment on counselors and administrators was pointed out as the limit. The five main issues on youth selected by 19th congress members are adulthood transition delay, private tutoring, youth violence and hazardous environments, increas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of the youth, and low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We have proposed policies to promote youth competence, health, presented the Youth Policy of keywords that require social consensus we propose independence, safety, and integration, focused on the happiness of youth.

Keywords: Lee Myung-bak government, youth policy, achievement and limitations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홍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중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 · 이경상 · 변승환 · 유홍식 · 김현수 · 김동일 · 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 · 김영지 · 김지연 · 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 · 김진호 · 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 · 장근영 · 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 · 전연진 · 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 · 성윤숙 · 김경준 · 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 · 조진우 · 박형근 · 이수경 · 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 · 조남익 · 손익숙 · 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 · 이유진 · 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 · 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 · 이해연 · 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 · 김기현 · 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 · 장근영 · 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 · 김지경 · 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 · 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맹영임 · 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 · 김준홍 · 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성윤숙 · 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 · 최인재 · 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영지 · 유성렬 · 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 · 윤철경 · 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I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II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황과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수시과제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인 쇄 2012년 12월 24일

발 행 2012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 문 사 02) 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